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이명박 정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환불제와 서민 대상 무담보 저리 대출제,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친서민’ 정책들은 애초 진보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이명박은 진보 단체들의 요구 중 가장 덜 급진적인 것만 골라 그 껍데기만 베껴갔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숨막히는 서민의 삶에 잠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한숨 돌리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어 보인다. 서민 경제의 위기가 워낙 심각해 이 정도 ‘돈 빌려 주는’ 수준의 정책들로는 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올해 생활 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합산해 산출하는 ‘생활경제고통지수’는 통계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최대치다. 반면, 소득증가율은 최저다. 그래서 빚을 내 가게를 꾸려가다 보니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인 65.1퍼센트다.

그래서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은 환영하나, 연간 1천만 원이 넘어가는 등록금 자체를 깎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학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폭등을 조장하면서 돈만 꺾 주면 뭐하냐는 것이다.

빚쟁이

다수 청년들에게 빚쟁이인 채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제도 시행을 이유로 5백 75억 원이나 되는 근로장학금 예산이 삭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던 무상 장학금도 없어진다.

심지어 교육과학부는 대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졸업 후 배우자에게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등록금 환불제가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거라는 우려도 크다.



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비 20퍼센트 인하를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조삼모사일 뿐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초과 이익만 10조 원을 넘겼는데 이윤은 건드리지 않고 기존의 다른 혜택을 줄여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보급자리주택 정책의 경우, ‘서민 복지’ 보다는 ‘건설 경기 부양’에 주목적이었다.

정부는 공급 목표치인 1백50만 호 중

60만 호를 정부 임기 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32만 호가 ‘분양’ 주택이다.

또 이런 대규모 개발은 지난겨울 용산처럼 철거민 문제 등을 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주택난 자체가 뉴타운 등 동시 재개발로 대규모 주택 철거가 일어나 벌어진 일이다.

분양가도 별로 싸지 않다. 서초구 ‘보급자리’ 아파트는 분양가가 3.3제곱미

터(1평)당 1천1백50만 원이나 된다.

또 이명박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하 미소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과 은행에서 2조 원을 모아 서민 저리 대출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부담 비용은 없고, 오히려 기부 기업들에게 법인세 절반을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반면, 서민들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소수만이 1인당 1천만 원으로 한정된 저금리 대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

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실업·빈곤 같은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돈만 꿔 주는 것이다.

그나마 박원순 씨의 폭로에 따르면 이미 희망제작소가 하나은행과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강제로 빼앗아 실시하는 것이다. 일종의 저작권 침해다.

이처럼 ‘친서민’ 정책은 과대포장된 반면, 반서민 정책은 거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

막대한 부자 감세 정책과 4대강 예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예산, 비정규직·청년실업자·장애인·공공의료 관련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했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을 개악하려 하고, 고용 유연화로 대량 해고 정책을 확산시키려 한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공서비스의 사기업화와 공공요금 인상, 대량 해고의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올 상반기 주요 사교육 업체의 당기순익은 평균 13.6퍼센트나 증가했다. 사립대 77퍼센트가 법정전입금마저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돈을 환수해 등록금 인하와 무상교육에 써야 한다.

용산에서 삼성과 포스코의 예상 개발 이익은 5조 원에 달했다. 이런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환수해 현재 15만 호가 넘는 미분양 주택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써야 한다.

돈만 꺾 주지 말고 부자 감세나 4대강 사업에 들어갈 돈으로 빈곤·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진정한 친서민 정책들을 기업주 등 부자들에게 기반한 이명박 정부가 수용할 순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10·28 재선거 등에서 이명박 ‘친서민’ 정책의 허구를 폭로하고 이런 급진적 대안들을 효과적으로 선전하며 이런 요구를 가능케 할 대중운동 건설의 발판을 다져야 한다.

김문성 객원기자 | enlucha@left21.com

공무원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축하하며

11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역사적 전진을 이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됐다. 너무나 기쁘고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에서 78퍼센트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통합에 89.6퍼센트, 민주노총 가입에 68.3퍼센트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이제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첫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노조 규약 제정, 민주노총 가입 결정, 공동위원장 추대 등을 논의하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1백97명이 파면되고, 2백4명이 해임된데다 2006년 노조사무실까지 폐쇄되는 등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았다. 이런 탄압 속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를 고수하자는 촉과 특별법을 수용해 설립신고하자는 촉의 논쟁과 갈등 끝에 노조가 분리되는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 연금 개악 등 공무원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높였다.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는 전교조 등 다른 조직들과 함께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선 공동행동을 벌였고,

2008년 11월 22일에는 전국에서 5만여 명의 공무원이 여의도에 모여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성공적인 집회를 열었고, 약간의 양보도 얻어냈다.

음해와 매도

연금 개악, 구조조정, 임금 동결(사실상 삭감)과 같은 공격과 이에 맞선 단결과 투쟁이 공무원 노조를 다시 통합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이번 총투표를 앞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음해와 매도를 퍼부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총투표를 “불법”이라고 협박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통합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고, <조선일보>도 통합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가진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특정 이념 정당이 장악하는 꼴이” 된다고 거품을 물었다.

행안부는, 민주노총이 “근로자의 권익향상 보다 정치·사회참여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합원의 반대표를 선동했고,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에 의지해서 근로조건을 개선시킨 산하 단체들이 과연 몇 곳이나 되”냐며 민주노총 가입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온갖 공격 속에서도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통과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행안부의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의 공무원 활동가들은 투표 행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 조합원들 역시 정부의 협박과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격에도 거리낌없이 투표했고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했다.

▶ 3면으로 이어짐

종합

세상을 움직이는

“장관이 되면 머리띠 매고 수염 안깎고 회사에 나가는 것은 꼭 고치고 싶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태희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부모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위장전입 딱 걸린 자유선진당 박선영이 한 달 전에 한 말

“공범이지만 돌아가셔서 기소하지 못했다”

용산참사 희생자들도 ‘방화 공범’이라는 검찰

“정책의 오류로 위장전입을 촉발한 측면이 없었는지 ... 주민등록 제도에 개선할 대목이 없는지도 챙겨봐야 할 것”

위장전입을 합법화하자는 <동아일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

위장전입, 병역비리, 탈세 등이 대수냐는 대통령실장 정경길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

박지원 : “20년 넘게 용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불안한 사람들[용산참사 유가족] 두고 연 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십니까” 이귀남 : “예,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전철에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통신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비싸게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 고홍길의 통신비 인하 대책

“어릴 때부터 항상 군복무를 마치고 싶었다”

정운찬, 뭐냐?

“[위장전입은] 그 동네에 가서 살 생각으로 잠깐 실험을 한 것”

실험정신이 투철한 정운찬

‘친서민’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용산참사 살인 정부의 원죄

이명박이 ‘친서민’ 가면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추악한 얼굴 중 하나가 바로 용산참사를 일으킨 살인 정부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개각을 하며 ‘화해와 통합’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해를 하려거든 용산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반민주적 살인 정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다.

이 때문에 개각을 앞두고 서울시장 오세훈이 천주교와 불교계 인사를 찾아가 용산참사 유가족 측과의 비공식 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정부, 서울시, 민주당 용산참사 대책위, 용산참사 유가족 측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공식 4자 협의체’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을 숨겨두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고, 경찰은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3보1배와 1인 시위마저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다.

‘중도실용’의 가면 구실을 하는 총리 후보자 정운찬도 “농성자의 화염병 투척이 용산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경찰청장 김석기를 구속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

며 살인 범죄를 비호하고 고인들을 모독했다. 그러나 9월 17일 용산참사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분석실장조차 “발화 지점은 특정할 수 없다”며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고인이 된 5명은 죽었기에 기소하지 않았다”며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을 지르는 ‘자살 테러’를 통해 서

로 죽이고 죽었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려서지 않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정부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것은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뉴타운, 경제 위기 고통전가는 제2·제3의 비극들을 예고하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

민’ 정책이 기만임을 폭로하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전국 순회 촛불추모제를 열고 9월 26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범국민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명박의 ‘친서민’ 가면을 벗기고, 8개월이 넘도록 시신을 싸늘한 냉동고에 안치한 채 추석을 앞두고 있는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김인숙

전교조에 대한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김성보 경수중학교 교사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는 무한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 일제교사는 학생들에게서 방학을 뺏어 갔다. 정부는 하위권인 학교들에 학력 향상 대책을 주문했고, 학생들은 방학도 없이 0교시 문제 풀이, 점심시간 학습, 방과 후 학습, 야간 보충 등에 끌려다니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데 동원된다. 성과급을 위한 ABC등급 평가, 인사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가 확대되고 있어서 교사들 간의 경쟁도 늘어날 조짐이다. 학교기관평가를 통해 학교별 차등 성과급을 한다고 하니, 전시성 업무가 폭주한다. 자율형 사립고 대거 지정과 중학생의 고등학교 선택 진학제는 고교평준화를 무력화시키고 고등학교 간 경쟁, 지역별 경쟁을 강화시킨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학교 예산을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항의하는 전교조 교사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반대해 온 전교조는 최근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에 일제교사를 반대하고 학생들에

게 선택권을 안해줬던 교사들 중 8명이 해직됐고, 올해 일제교사 불복종 선언을 했던 교사들은 경고처분을 받았고, 그중 11명은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주의와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이 압수 수색 당했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89명이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일제교사 당시 성적 부풀리기 조작을 해서 좌천됐던 자들은 모두 금의환향했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탈법 선거의 백화점 같았던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1심에서 겨우 6개월 구형을 했던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행동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년치의 개인 이메일을 뒤지고, 간접적으로 이어진 은행계좌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회하며 무리하게 수사하여 2년에 이르는 구형을 했다(1심 선고일이 9월

24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장전입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출세를 위한 권장 사항이 되고, 공교육 강화와 민주주의 요구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에 반하는 죄’가 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강한 탄압이 일시적으로로는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오픈하고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지난 교사 시국선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폭발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더구나 불법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교육 정책은 소수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전교조의 저항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승리할 것이다.

전교조는 10월 13, 14일 일제교사에서 학생들의 응시 선택권 보장을 외치고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전교조를 지지하고 방어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이주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난민 불인정과 강제 송환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한 이란 난민이 강제 송환을 하지 말라고 절박하게 요구하며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넘게 단식하고 있다. 오랜 구금과 단식으로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다. 그는 2005년 12월 이래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무려 4년째 구금돼 있다.

그가 난민 신청을 한 사유는 ‘개종에 따른 박해 위험’이다. 이란에서는 개종한 사람에 대한 관습적 보복이 이뤄져 왔다. 게다가 2008년 9월 ‘배교자’에 대한 고문·사형 등의 처벌을 명문화한 형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따르

면 이 이란 난민은 사형에 처해진다.(이란 형법 제225-7조)

이렇게 박해의 위험이 명백한 데도 한국 법무부와 법원은 끝내 그의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그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후에 난민 신청을 했고, 이것은 그가 강제 추방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보호소 안에서 난민을 신청한 이주민들 대부분은 이런 이유로 난민 불허 판정을 받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의 “난민 인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을 했다는 이

유로 강제퇴거해선 안 된다”는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취업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짜 난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16년 동안 2천3백97명의 난민 신청자 중 겨우 1백2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을 뿐이다. ‘가짜 난민’ 운운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숫자다.

그동안 한국의 난민 제도는 심각한 결함이 지적돼 왔다. 법무부장관의 1차 심사가 끝난 후 이의 신청을 해도 그 심사가 1차와 동일한 기관에서 이뤄지며 그것도

1차 심사와 동일한 자료만으로 이뤄진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이의 신청을 심사하는 난민인정협의회는 “2시간 동안 평균 1백35건을 심사하여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과연 이런 결정이 충분히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난해에도 버마 난민 신청자 여덟 명은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을 받은 후 무려 3년 동안 법원 소송을 통해서 겨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국 정부는 태국에 온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르포 ‘양지를 찾는 사람들’의 저자



2009년 9월 23일에 열린 이란 출신 난민 강제송환 저지 기자회견

이자 태국 언론인·인권운동가인 뱀 곳사왕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버마처럼 인권 유린과 내전의 잔혹함이 끔찍한 나라에서는 ‘이주 노동자’, ‘난민 노동자’, ‘망명자’, ‘정치적 난민’의 구분이 명백히 이뤄질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 이들은 모두 정

치적 폭력과 비인간적 상황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강제 송환을 거부하며 단식 중인 이란 난민을 지금 당장 석방하고,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 구금돼 난민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치

국정원에게 2억 원 손배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하는 국정원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정보기관들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 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 나라’가 고베 조선고급학교 자선 공연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이들을 찍고 있던 수상한 사람이 발각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 체류 일정과 현지 채증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공문, 공연장 지도와 객석 도표, ‘우리나라’ 사진 등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결국 기무사 요원이라고 실토했 수 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재일교포에게 책 보내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뜨겁 습니다’에 대한 사찰이 폭로되어 물의를 일으킨 뒤에도 기무사는 버젓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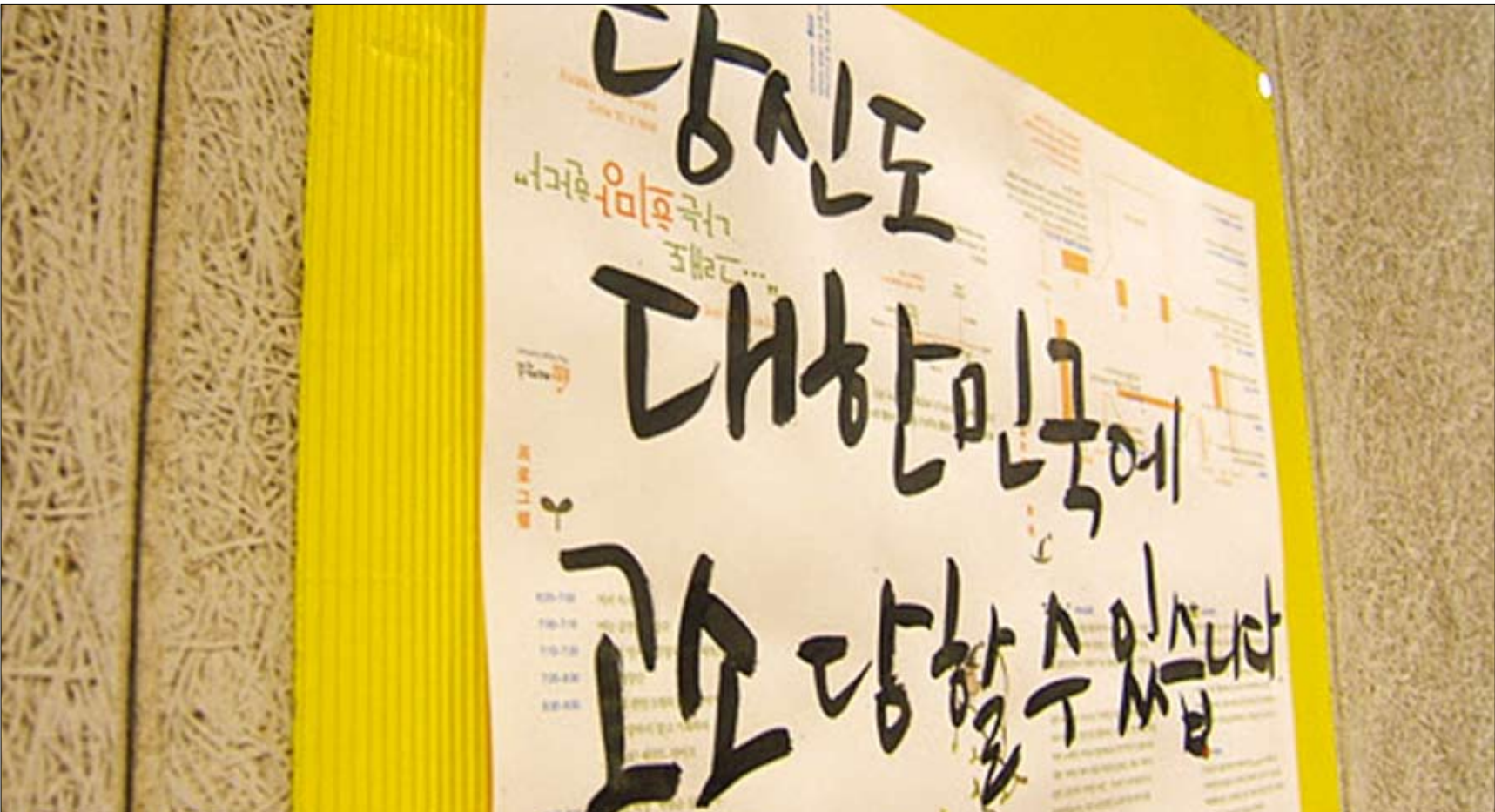
이런데도 기무사와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태영은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다”며 잡아떼고 있다.

특히 재일교포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한 ‘우리나라’와 ‘뜨겁습니다’에 대해 조직적이고 집요한 사찰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친북의 굴레를 벗어난 조직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불길하기만 하다.

방귀 편 높이 성낸다

기무사 뿐만이 아니다. 최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에 의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도 폭로됐다.

국정원은 희망제작소와 위탁계약한 정부 사업 취소, 하나은행의 희망제작소와의 사업 중단 등 굵직한 것부터 아름다운커피 카페 오픈식, 아름다운가게 지원, 자선바자회 개최 같은 세세한 것까지 개입했다.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



9월 17일 박원순 이사의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종로구 평창동 희망제작소 회의실 내부 벽에 붙은 팻말

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후원과 공동사업을 중단하라고 기업과 대학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방귀 편 높이 성낸다고 국정원은 오히려 사찰을 당했다는 박원순 이사의 <위클리경향>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참여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영향력 있는 박원순 이사

를 탄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전반적인 활동 위축을 노리고 있다. ‘시민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박원순 이사를 공격해 다른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본패를 보이려 한다.

특히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정부 후원금과 공동사업을 취소하고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후원을 끊는 방식으로 비열하게 목을 죄며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에 재정을 의존하고 지원을 받아서 개혁을 이

루려는 방식의 한계도 보여 준다. 물론 이것이 부당한 국가 탄압에 맞서 시민단체들을 방어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와 형사가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의 강연도 버젓이 사찰을 했으니 사람들이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속속 밝혀지는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패치감청, 인터넷 게시물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추진 등 정신없는 역주행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5공 때 ‘관계기관 대책회의’처럼 불법 노동 사찰을 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 그리고 저항을 억누르려고 기만적 양보 조치도 취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사찰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증스런 이명박의 ‘친서민 사기극’의 본질이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꽂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9월 3일 발표된 ‘중도·실용’ 내각의 후보들이 “청와대 위장 전입자” 소리를 듣던 이명박의 동반자들답게 하나같이 위장전입,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람들의 푸념처럼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주류 특권층에서 총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청문회를 통해 피죄죄한 본질이 드러나 버린 정운찬은 지난 3년간 공식 수입 외 소득이 3억 6천만 원이다. 다운계약서와 수 차례 자문료 수입 미신고로 탈세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이규남도 다운계약서로 탈세했다.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란 변명이 많은 것은 이들이 부와 특권의 대물림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보여 준다. 총리 후보 정운찬뿐 아니라 법무장관 후보 이규남과 대법관 후보 민일영, 검찰총장 후보 김준규 등 법 집행 관료 후보들이 모조리 위장전입 전력이 있다.

또, 이들은 공직과 기업을 왕복하며 특권층 인맥을 공고히 하고 부패고리를 형성해 서로 돕고 도움을 받

아 왔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주류 국회의원들도 명문대 문종과 사계 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잘못을 추궁하기보다 교묘하게 감싸주곤 한다.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재임 기간에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사기업의 유급 고문을 맡았다. 영안모자 회장 백성학에게는 1천만 원을 ‘용돈’으로 받고 총장 선거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그는 MB내각 총리 후보답게 병역기피, 위장 전입 등 이번 후보들 중 흠집이 가장 많다.

뻔뻔

이들의 답변도 참으로 뻔뻔하다.

정운찬은 예스24 자문료 수입 문제에 “인터넷책방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런! 회사 사정도 모르는 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예스24 임원진이 징계감이다!

여성부 장관 후보 백희영은 용산 재건축 지역 투기 의혹을 해명하면서 “집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끼리끼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감보다 사

회를 지배하고 부를 세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보니 아래로부터 저항에 대해서는 혐오감과 냉소, 적대감을 공유한다.

정운찬은 수사기록이 전부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1월 용산 참사의 원인이 화염병 투척이라고 용감하게 일갈했다. 두 차례 위장 전입과 소득 신고 누락으로 탈세 혐의를 받은 노동부장관 후보 임태희는 합법 단체들인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편다.

이렇게 사회정의의 위한 법도 밥먹듯이 어기는 자들이 앞으로 노동자·서민의 저항을 악법으로 억누르며 준변 운운하면 “다중인격자를 보는 듯”(참여연대)할 것이다.

고위 관료들과 이들을 둘러싼 부자들의 연결망은 워낙 단단해서 하층민 출신에게는 극도로 배타적이다. 심지어 그토록 친기업 정책을 폈는데도 노무현은 변변찮은 집안의 상고 출신이란 이유로 이들에게 무시당하곤 했다.

이런 자들 안에서 고위 공직 돌려막기를 하니 신용불량 상태를 피할 수 없다.

김문성 객원기자 | enlucha@left21.com

▶ 1면에서 이어짐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경제 위기 속에 공무원노동자의 처지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며 “정치적 중립”으로 안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노동자는 굉장히 ‘피로’하다. 출근은 앞당기고 퇴근은 뒤로 미루는 ‘열리버드 운동’,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감축, 기록적인 물가인상에도 동결되는 임금, 임금의 일부인 각종 수당에 대한 공격 등으로 공무원의 77.7퍼센트가 정부 정책 때문에 피로감이 높아졌고, 74.7퍼센트가 이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2008년 5월 KBS시사기획 <쌈> 여론조사)

지난 5년간 물가는 15.2퍼센트를 올랐는데, 공무원 기본급은 8.2퍼센트 올랐다.

그래서 공무원의 노조 조직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 발효 직후 7만9천 명 조합원에 조직율 27.7퍼센트이던 것이 2008년에는 조합원 21만5천 명에 조직율 75.3퍼센트가 됐다. 노동부조차 “공무원노조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핵심 이슈” 때문이라고 분석한다.(2008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 노동부)

압도적인 통합 찬성과 높은 찬성율로 민주노총 가입을 지지한 조합원들의 열망은 무엇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지를 바꾸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격을 막아내고 싶다는 데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경제 지표상 호전은 순전

히 국가 재정 투입의 효과이고 조만간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연금, 민영화 등)을 통해 그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노조는 당장 지금 국회에 올라있는 “가장 강도 높”은 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개악 저지에 나서야 한다. 임금 동결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때문에] ... 공무원 임금 동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런 투쟁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그토록 두려워 거품물며 떠들어댄 “정치적 행동”도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조합원들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동”에 반대하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광우병소고기 관련 부당업무지시 거부, 대통령 불신임 추진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시국선언 시도까지 꾸준히 “정치적 행동”을 해왔고 이 때문에 탄압받았다. 우리는 부패와 반부패 사이에서, 민주와 반민주 사이에서, 재벌·부자와 서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런 “정치적 행동”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서라도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특수한 요구뿐 아니라 반민주·반서민 정책에 맞선 전체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전체 사회의 세력관계를 노동자·서민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박천석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

정치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10월 28일 재보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 초전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완패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는 ‘친서민’ 콤플렉스로 반전을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언론법 날치기 통과, 쌍용차 살인 진압, 기무사·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서민 정책’의 실체다.

또, 복지·공공 예산을 삭감해 서민 지원책을 발표하는 카드 돌려막기 식 ‘친서민’ 콤플렉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위장전입’ 개각은 이명박 정부가 변함 없는 강부자 정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을 뿐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안에서는 그나마 지지율이 조금 오른 지금 ‘박차’를 타려는 출세주의자들 사이에 공천 다툼이 한창이다. 박희태가 예비후보로 확정된 경남 양산에서는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양수가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안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들 여섯 명이 예비후보로 내정된 전 안산시장 송진섭의 뇌물비리와 일급 차레나 되는 당직 변경, 음주운전 경력 등을 폭로하며 반발했다.

진보진영의 단결이 중요

진보진영은 이 파렴치하고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고 지난 4월 재보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반이명박 정서가 진보진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진보진영의 단결이 중요하다.

물론 단결 노력이 자칫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특히 반이명박 전선을 내세우며 진보 후보더러 사퇴하라는 압력에 절대 굴복해



임종인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길 의원과 심상정 전 의원 — 진보진영은 반이명박 정서를 대변할 진보 후보들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야 한다

선 안 된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을 지원하는 파병 정책 등 민주당은 진보진영과 정반대의 ‘대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 이후 잠시 상승했다 도로 정체하고 있는 지지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당에 보내는 대중의 눈길은 여전히 반신반의 상태다. 언론법 개악 저지 투쟁 등에서 민주당이 취한 모호

하고 타협적인 태도는 이런 불신을 더욱 키웠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친노무현 세력조차 따로 정당을 만들고 있고 손학규조차 ‘반성이 더 필요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지난 4월 울산 북구 선거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진보 개혁 열원 대중의 자신감을 북돋워 줬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현 교육감이 진보 후보로서 당선

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미 진보 후보 단일화를 이른 안산 상록읍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세 곳의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은 어느 정당 후보인지 관계없이 진보 후보라면 적극 지지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번에 경남 양산에 출마한 박승흡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지난 울산 북구 후보 단일화 때 취한 잘못된 태도를 진보신당이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사진 제공 민중이소리

민주당 견인론에 대해

반MB연합을 정당화하는 ‘좌파적’ 논리의 문제점

민주노동당이 반MB연합을 총종결음으로 따라가고 있다. 9월 16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필자를 제외한) 토론자들 대부분이 반MB연합에 찬성했다. (성원 미달로 유회된) 9월 19일 중앙위원회의 사업 계획도 반MB연합을 강조했다.

물론 민주당의 수호 같은 정치 투쟁에서는 많은 동맹자들이 있을 수 있다. 때로 민주당 같은 자본가 야당도 일부 정점에서 민주주의 후퇴에 반대해 싸울 수 있다. 물론 그들은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문제를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 들겠지만 말이다. 이때, 진보진영이 이 투쟁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치 교육을 자본가 야당 손에 맡기고, 결국은 자본가 민주주의의 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그들에게 정치 투쟁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뿐이다.

좌파는 이런 투쟁에 개입해 민주당이 한 발자국만 내디디려는 그 순간을 포착해 그들로 하여금 1미터 이상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제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MB연합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180도 다른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포괄적 정치 동맹이다. 일부 민주노

동당 리더들은 벌써부터 한국의 지배계급(비록 비주류일지라도)을 대표하는 자본가 야당과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을 언급한다.

산수와 역학

일부 민주노동당원들은 ‘주체 세력의 강화’(즉, 민주노동당 강화)를 통해 반MB연합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009년 판 반MB연합의 정당성을 옹호하다 1980~90년대 ‘비판적 지지’의 실패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존재 자체가 ‘비판적 지지’를 예방하는 백신은 아니다. 조직상의 독자성이 곧 정치적 독자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럴 조건을 마련해 주지는 하지만 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노동당의 ‘열린우리당 2중대’ 구실 논쟁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반MB연합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제대로 분만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위험을 증대시킬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노동자 정치 의식에 혼란을 주입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반MB 투쟁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MB연합 정책의 **일반적 방향 문제**와 관계 있다. 노동자 정당이 자본가

의 경제 지배력에 맞선 근본적·급진적 투쟁을 자제·포기할 때만 자본가 야당과 한결같은 정치적 동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같은 반MB연합의 좌파가 민주당을 견인할 수 없는 까닭이다. 오히려 노동자 조직이 반MB연합의 그물에 걸려 움푹달작 못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반MB연합에 산수 규칙, 즉 덧셈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계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학을 이해해야 한다. 반MB연합 내 정치적 동맹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분력(分力) 경향이 있다면 합력(合力)은 0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불길한 조짐을 힐끗 봤다. 지난 7월에 민주노동당은 쌍용차 노동자 파업이나 민주주의 투쟁에 열의를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민주당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느라 비정규직법 개악 논란에서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민주당을 편든 바 있다. 또, 의회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도 기업의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국유화(공기업화) 요구를 회피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한편, 민주노동당 리더들은 ‘한국적 특수성’(가령, 외세의 간섭과 독재 정권의 등장)을 들어 반MB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적 특수성’

이 아니라 오히려 인민전선(반MB연합의 역사적 명칭)의 역사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난 논거다. 1930년대 프랑스·스페인·중국·브라질·체코슬로바키아, 1970년대 칠레 등에서 노동자 계급의 지도자들은 이른바 ‘후진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유주의적 자본가 정당과 정치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노동자 운동의 패배라는 커다란 재앙으로 끝났다.

일부 민주노동당 사람들은 반MB연합을 비판하는 우리에게 힐문한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급선무다. 이명박 정권에 맞선 반MB연합의 승리는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다.’

물론 양자 사이에서 적대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당연히 민주적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같은 불철저한 ‘민주주의자들’과 동맹하는 계급 연합 방식보다 계급투쟁 방식을 통한 민주적 권리 옹호가 훨씬 더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 노동자 계급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단계론에 입각한 반MB연합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자성과 주도성 약화를 대가로 근본에서 민주당을 강화해 주는 시멘트 구실을 할 뿐이다.

김인식 | kis@left21.com

정세균 자서전 《정치 에너지》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쏘는 비난의 화살

민주당 대표 정세균의 자서전 《정치 에너지 —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서민적으로》는 흥미롭게도 조중동으로부터는 우호적 평가를, 〈경향신문〉으로부터는 혹평을 받았다.

이 책에서 정세균은 적잖이 이명박을 비판하지만, ‘공공의 적’에 대한 비판치고는 순하다. 반면 진보세력을 향해서는 가시 돌친 비판을 한다.

예컨대, 그는 이명박에 대해 “내가 만나본 대통령은 오히려 지나치게 솔직했고” “여야로 갈라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괜찮은 사람”이며 “개인적 선호를 떠나 어쨌든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정세균은 바로 그 대통령을 퇴진시키려 한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거리의 촛불을 아름답다고 추앙만 하는 지식인이나 촛불을 횡설로 만들어 정권 퇴진에 나서자는 운동가에게는 동조하기 어렵다… 눈감고 추상적 이념에만 몰두하는 일부 진보파의 주장을 볼 때마다 책임성의 결핍을 느낀다.”

이 대목에서 정세균은 “촛불시위보다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최장집 교수의 말을 인용한다. 대중투쟁을 혐오하는 자본가 정치인의 계급적 본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계급적 본능

그는 진보진영이 “실현 가능한 진보”에 무관심하고, “보통사람이 갖게 된 건전한 불만에 편승해 정치를 욕보이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보통사람들의] 기대에 상처를 입히고” “[정치를] 타락시킨다”고 맹비난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실현 가능한 진보”의 사례는 대부분 한나라당과의 무원칙한 타협들이다. 그는 DJ정부 당시 노사정위원을 하며 정리해고를 합의한 일, 노무현 정부 당시 우파의 압력에 밀려 과거사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킨 일, 최근 한나라당과 언론악법 문제를 타협하려 한 일 등을 모두 ‘현실적 타협’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에 상처를 입’힌 것은 진보진영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자칭 “시장주의자”인 정세균이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을 보노라면 그 당과 전략적 동맹을 맺으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 수 있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촛불항쟁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에 맞서는 주된 세력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었다. 이때 반이명박 운동의 주도권은 거리에 있었고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이 가라앉은 이후 이명박에 맞선 투쟁은 주로 ‘반MB연합’으로 정식화됐고, 여기서 주요 쟁점은 늘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였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항수를 불러일으켜 민주당의 지분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가 용산참사 항의 운동, 언론악법 저지 운동, 6월 10일 범국민대회 등에서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한 것은 불가피한 타협이었다. 이 운동에 민주당이 참가한다는 이유로 좌파가 불참한다면 민주당에게 운동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만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조차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류의 입장은 문제다.

그런데 지금 반MB연합을 추구하는 주요 개혁주의자들은 아예 포괄적 쟁점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일진일퇴식의 치열한 참호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대중운동 건설보다 선거를 통한 MB심판에 더 주력하는 듯하다.

주도권

상반기 동안 사안별로 운영된 야4당 연석회의는 아예 상설화됐고 여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민주노총, 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정의가 참가하고 있다. 이 기구 자체가 한시적·사안별 제휴라는 틀을 넘어 포괄적 연합이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단체 대부분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반MB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더 나아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MB, 반한나라당 정치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두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태완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도 노골적으로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론을 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 제시민사회운동이 공



2009년 6월 10일 집회에 참석한 야4당 지도부 전술적 제휴를 넘는 ‘반MB선거연합’은 이명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알아 먹을 것이다.

사진 이미지

민주당은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적 기반 속에 자신들의 우위를 원할 뿐이다. 인민전선이 뗏어지면 그 내에서 좌파들이 친자본주의 동맹자를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 노동계급 운동을 자제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동으로 훌륭한 후보를 추대”하거나 “후보 단일화를 강제하는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보수 우위 시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새 활로’, 《시민과 세계》2009년 상반기호). 이것의 목표는 “제2의 혁신민주정부 수립”이다. 진보신당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경제적 대안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민들레연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MB 선거연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진보신당은 상설화한 야4당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물론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면 노동계급의 실망감이 커질 것이므로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퇴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나라당만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단지 야4당 중 하나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당이다. 민주당은 10년간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면서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반노동자·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비정규직법, 한미FTA, 도시재개발, 쌍용차 대량 해고 등 반MB 쟁점 대부분은 그 뿌리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

진보대연합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인민전선)은 우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정한 힘을 알아먹을 것이다. 민주당은 체제의 안정을 뒤흔들 대중운동의 성장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적 기반 속에 자신들의 우위를 원할 뿐이다. 그래서 지난해 촛불항쟁에서 그랬듯이 대중 운동이 고양될 때 잠시 올라탔다가 운동이 그 이상으로 발전하려 하면 공무리를 빼거나 운동을 자제시키려 해 왔다. 이 때문에 인민전선이 뗏어지면 그 내에서 좌파들이 동맹자를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 노동계급 운동을 자제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인민전선 정치의 문제점은 상반

기 투쟁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뒤통수 치기를 연발했다. 지난해 말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된 예산안에 동의해 줬고, 올해 2월 미디어법 투쟁 2라운드에서도 ‘100일 후 협의의 처리’를 합의했다. 6월 10일 6만여 명이 모여 운동이 절정에 이른 직후 또다시 국회로 들어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와 언론악법 처리에 유유부단하고 동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개혁주의자들이 민주당과의 동맹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더 큰 죄를 물리치기 위해’ 불철저한 동맹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삼갔고, 독립적 투쟁을 건설하려는 노력 없이 ‘무장 해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운동은 거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특히, 6·10 범국민대회 이후 운동을 고무할 절호의 기회에 민주당의 숨고르기에 박자를 맞추며 “집회와 항의 행동보다 2010년 지방선거까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고 뒷걸음질친 것이 가장 큰 오류였다. 이것은 쌍용차 투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추수와 그로 인한 운동의 힘 빼기가 반복되면 대중은 투쟁의 효과에 회의를 느끼기 십상이다. 이것이 인민전선(정치)의 최대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반MB 선거연합’과는 다른 선거대안은 있는가?

‘다함께’가 제안하고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 당시 채택했던 진보대연합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보대연합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시도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 지지자만이 아니라 아직 그까지 오지 않았지만 반한나라당·비민주당을 지향하는 세력까지 결집하는 선거대안이 필요하다.

이 대안이 성공하려면 적극적으로 진보선거연합 후보를 발굴하고 지지를 규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촛불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대안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한 무소속 임종인 후보를 이번 10월 안산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추대한 것이 진보대연합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임종인 후보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진보정당은 한나라당 당선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과 인민전선 전략은 공존할 수 없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실패한 민주대연합의 재판이며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MB 선거연합을 합리화하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논리가 성행한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과거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이라는 독립적 정당이 존재하므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합리화한다. 최근 이 논리는 민주노동당 활동가들로부터 자주 들린다. 또,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대중 투쟁을 통한 진보 세력의 역량 강화가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조지

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것이 인민전선의 문제를 불식시키지 못한다. 1930년대 프랑스 인민전선에서 공산당은 현재의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세력이었다. 프랑스 노동계급은 1934년에 극우파의 쿠데타를 저지했고, 1936년에는 공장 점거 운동과 총파업으로 대대적인 양보를 받아낼 정도의 힘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 당수 모리스 토레즈는 인민전선 내의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급진당)과의 동맹을 위해 “인민전선은 혁명이 아니다. 파업을 시작했으면 끝낼 줄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이에 힘입어 1938년 급진당의 탈라디에는 인민전선

정부의 총리가 된 후 노동자들에게 반격했다. 그러나 트로츠키의 표현처럼 “포도주가 식초로 변하”듯이 노동자들은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산당이 노동계급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동안 투쟁력이 훼손돼 세력균형이 달라진 것이다. 결국 1938년 공산당은 급진당에 의해 인민전선에서 쫓겨났고, 파시즘보다 노동계급의 투쟁을 더 두려워했던 급진당은 결국 파시스트에 권력을 내줬다.

‘투쟁을 통한 견인론’도 문제를 내포하진 마찮가지다. 인민전선 속에서 투쟁을 강화하려 할수록, 민주당은 동맹에게 압력을 넣어 투쟁을 자제시키거나 여의치 않으면 동맹에서의 이탈을 협박할 것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조직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것이 인민전선의 문제를 불식시키지 못한다.



1936년 프랑스에서 인민전선 정책을 채택한 사회당의 레온 블룸(좌)과 공산당의 모리스 토레즈(우)

이다. 그런데 인민전선주의자들은 인민전선을 여차하면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 목표에 충실하려 할수록 선거연합은 그물처럼 노동계급의 투쟁을 엮어낼 것이다.

‘투쟁을 통한 견인론’은 프랑스 인민전선을 비판하며 ‘투쟁적 인민전선’을 내세웠던 프랑스 사회당 좌파 마르소 피베르의 구실을 떠오르게 한다. 트로츠키는 피베르가 ‘투쟁적 인민전선 강화를 위해 인민전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전투적 노동자들을 인민전선에 묶어두는 “일종의 아편” 구실을 했다고 지적했다.

종합

북미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는가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빌 클린턴이 억류된 두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후 이런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10월 양자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시 정부와는 다른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물론 오바마 정부의 구상이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가 시간만 끌면서 임시방편으로 대응한 것 때문에 북핵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하고 미국의 위신만 떨어졌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재와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구상이 어떠한 관계없이, 오바마 정부가 처해 있는 객관적 조건이 부시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다.

부시 정부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라크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핵 선제공격 염포와는 달리, 결국 부시 정부는 중동 전선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면서 시간벌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정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계속된 병력 증

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또다시 증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대선의 부정 선거 논란은 친미 정권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중동에서의 군사 작전 위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은 불가능하다. 로켓 발사, 핵 실험 등 점점 군사적 시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보며, 상처받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제재를 추진했지만 그조차 효과가 크지 않았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제재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물론 북핵실험 초기에 중국은 유엔결의안을 지지하고 제재에 동참하는 듯했다. 초기에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불안정을 키워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는 것이 못마땅한 데다, 미국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북 압박에 동참했다. 그러나 북한을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막아 주는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은 취약해진 북한 체제가 제재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결국 지난 4월 초 북한 로켓발사 직후 “다함께” 김하영 운영위원이 본지에 썼듯이, 오바마 정부 또한 “중동에 발이 묶여 북한과 대화하는 것말고는 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오바마 정부는 결국 부시 정부가 갔던 길을 고스란히 밟고 있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양자 회담은 북미 관계를 해빙 무드로 이끌 것인가? 부시 정부 때 6자 회담이 주로 미국의 시간벌기용 성격이 강했던 반면,



김정일을 만난 클린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미관계는 지난 20여년 간 여러차례 반복됐다

양자 회담은 미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 대한 커다란 양보안을 제시할 것 같다는 기대가 강하다.

물론 양자 회담이 시작되면 미국이 북한을 달랠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회담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실제 협상에 나서기까지 여러 구상을 재 보고 동맹들을 다독이느라 꽤 시간을 끄는 듯하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전임 민주당 정부 시기를 포함해 지난 20년간 북미 협상은 늘 난항을 겪어 왔다. 미국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양보는 미국의 위신 추락을 스스로 인정하는

풀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나선 미국은 힘겨루기를 하느라 종종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북한을 압박하곤 했다. 그래서 협상은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곤 했다.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할 때조차, 미국은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결국 지난 20년간 경색 국면과 대화 국면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문제 해결은 지연되고 위기가 심해지는 양상이 계속됐던 것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가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이조차 중동 전선에서

처한 미국의 위기를 간과하는 분석이지만), 이제 협상을 통해 미국이 양보하는 일만 남았다고 여기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동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위해 북한 문제를 이용하는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제국주의적 경쟁 논리를 고스란히 모방하고 있는 북한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있을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진정한 해빙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과 동맹국들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에서 나올 것이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기획연재 —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①

기후변화를 ‘현실적’으로 멈출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이 필요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할 것이다.

전 세계 기후변화 활동가들과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은 이번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맞아 각국 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하는 각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12일 코펜하겐에서 있을 회담장 밖 시위와 각국에서 열릴 시위들은 그 정점이 될 것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전 세계 환경단체,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은 선진국 정부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말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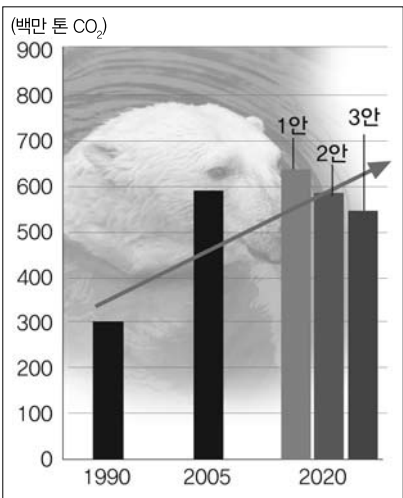
교토협약에 명시된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를 멈추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의무 감축 대상국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인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의 2007년 연구 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보다 80퍼센트 이상 줄이더라도 이번 세기 말까지 전 세계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과학자들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와 지구 기온 상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불연속적인 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삼을 수 있는 목표가 이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 동시에 엄청난 혼돈 상태로 빠질 수도 있는 임계점을 넘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지난 1백 년 동안 평균 기온이 0.7도 상승한 것만으로도 재해와 이재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이 목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토협약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일부 선진국들에서만 2012년까지 고작 5퍼센트 남짓 줄이는 것이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5분의 1) 배출하는 미국은 부시 정부 시절에 ‘경제적 피해’를 핑계로 교토협약에서 탈퇴했다. 미국과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그 보다는 훨씬 적지만 역시 10위권 안에 포함된 인도, 한국 등은 선진국이 아니라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토협약에서 주된 감축 수단으로 채택된 배출권 거래제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석유·석탄·자동차 기업 등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확보



국제 기준인 1990년 대비 갑절로 증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해 주는 시장 대안들이었다. 우리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처럼 그 논리의 연장선인 배출권 거래제도 우리의 미래를 끔찍한 재앙으로 몰고갈 것이다.

2도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나 실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낙후한 경제 상황과 낮은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의 빈국들에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의 감축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감축

목표도 낮추려 한다.

또,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 수단들을 강화하려 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부 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9위, 배출 증가율로는 세계 1위의 기후변화 ‘선진국’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갑절이 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게다가 핵 발전은 늘리고 재생가능에너지 지원금은 줄여 ‘녹색에 대한 기존과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는 비아냥만 사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활동가들도 코펜하겐 회의 대응 준비로 분주하다. 지난 8월과 9월에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청회가 두 차례 열렸다. 10월 16~17일에는 강화도에서 기후변화 활동가 캠프도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열린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한국의 주요 환경단체들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가 제시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기후변화를 멈추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날 제출된 안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한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보다 25퍼센트를 줄이자는 것이다(이것은 교토협약의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교하면 오히려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IPCC의 예측에 따르면 이런 기준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하면 안타깝게도 기후 재앙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부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배출권 거래제 같은 시장 대안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근본적인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운동은 지금의 시장 지상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 기후 재앙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목표와 수단 — 그것이 현재 체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 을 제시해야 한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배출권 거래제(탄소 거래)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그것을 초과하면 다른 기업에서 할당량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논리적으로도 전체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데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많은 양을 할당함으로써 대기업들에 오염권을 주는 것이다. 탄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해 오히려 배출량을 늘릴 우려도 있다.

국제

오바마의 중동부 유럽 MD 배치 철회

오바마는 미국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이란을 포위하기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될 미국의 이지스함이 SM-3를 발사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중앙위원, 지은 책으로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이 있다.

버락 오바마가 중부와 동부 유럽 미사일 방어(MD) 배치를 중단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을 이라크 재앙으로 미국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보여 주는 또 다른 신호로 볼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공화당 우파의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던 2001년 12월, 조지 부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을 비난하며 유럽에 MD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네오콘 로렌스 카플란은 이렇게 말했다. “MD의 목적은 미국을 방어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국경까지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미사일요격미사일(AMM)이 폴란드와 체코에 배치되는 것도 거들거들 반대했던 것이다.

지난해 8월, 러시아는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행동으로 입증했다. 친미 정치인 미하일 사카슈빌리가 당선된 뒤로 코카서스 지역에서 미국의 총견 노릇을 해 온 그루지야를 군사력으로 박살낸 것이다.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에 깜짝 놀란 부시와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보수당 당수 데이비드 카메론, 중부와 동부 유럽 정부들은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나선 이는 없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나토 또는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하려 애썼다.

그루지야를 박살내고도 아무런 보복도 당하지 않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오바마에게서 중부와 동부 유럽의 MD 배치 철회라는 중요한 양보를 얻어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때를 놓칠 새라 비난에 나섰다. 부시의 황당한 선택으로 UN대사를 지낸 존 볼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결정이 미국과 동유럽 국가들, 나토 내 상당수 국가들과의 관계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부시 정부는 늘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비판받아 왔는데, 오바마의 이번 결정도 다를 바 없다.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와 이란이다.”

미국의 포석

실제로 체코와 폴란드 정치인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을 동정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라크 파병에 동참할 때와 마찬가지로 MD를 지원하면서 이들은 자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아마 그들은 앞으로 미국에만 의존하는 식의 대외 정책을 지양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오늘날 미국의 취약한 처지를 고려한 것 외에 다른 요인도 있다. 그는 기존 핵무기 강국들의 핵탄두 감축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이란 같은 국가들의 핵 개발 정당화 주장들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이 협상이 성공하려면 러시아를 구슬려야 한다. 중부와 동부 유럽 MD 배치를 철회한 것은 이를 위한 포석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란 고립 작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MD 계획을 철회하는 데는 몇 가지 군사적 논점도 있다. 기술적으로 MD의 테스트 결과는 들쭉날쭉하다. 또 MD는 장거리 미사일 대비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이란의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이 주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이른바 ‘이란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SM-3 해

상배치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지중해 동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보이는 행위 이면에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포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MD] 2단계는 2015년 경부터 시작될 것인데, 우리는 성능이 향상된 SM-3를 동맹국 지상에 배치할 것이다. 이미 폴란드, 체코와 협상중이다.

“2018년에 시작될 3단계부터 우리는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다. 이것은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나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맞서 유럽과 미국을 보호해 줄 것이다.”

따라서 MD는 죽었다. 그러나 MD는 계속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무기 기술이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워낙 월등해서 선제 공격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행보들은 미국의 세계지배를 포기하기보다 그것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번역 조명훈 기자

러시아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보이는 미국의 행위 이면에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포석이 담겨 있다.

이집트

노동자 지원을 위해 단결한 독립 노동조합들

앤 알렉산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중동 문제 전문가

이집트의 수십 개 노동·인권 단체들이 징세 노동자들의 독립노조 의장 카말 아부 에이타의 재판에 맞춰 그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월 8일 검찰은 아부 에이타를 소환했고, 이에 이집트노총 소속 어용 은행노조의장 파루크 세하타는 불만을 표했다.

아부 에이타는 약 2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란 고지를 받고 풀려났다.

최근 징세 노동자, 교사, 방직 노동자, 제빵 노동자, 집배원 노동자 등은 다 같이 이집트노총에 항의했다. 그들은 우선 부패한 노조관료의 교체



집회에서 연설하는 카말 아부 에이타

구했고, 이집트노총이 임금·노동조건과 관련한 투쟁을 방기한다며 항의 표시로 집단 탈퇴했다.

2007년 징세 노동자들의 파업은 2008년 12월 최초의 독립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제 독립노조는 전체 징세 노동자 5만 명 중 4만 명 이상의 지

지를 얻고 있다.

독립노조 활동가들은 노조원들에게 조합비를 걷었다는 이유로 정부의 탄압에 직면해 있다.

징세 노동자들은 지난 8월, 어용 은행노조가 세무 관련 노동자들을 위한 새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도록 재무부장관이 허락한 것에 맞서 하루 파업을 조직했다. 당시 독립노조는 사회복지기금 창설을 위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아부 에이타는 얼마 전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주장했다.

“이집트에서 독립노조를 건설할 수 있다면, 나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각오가 돼 있다.”

번역 조명훈 기자

소말리아

전쟁이 격화되다

알카에다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살레 나브한을 노린 미군의 폭격이 소말리아에서 새로운 전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인들을 상대로 벌어진 공격들의 배후로 나브한을 지목했다.

소말리아 저항 세력들은 나브한의 죽음에 맞서 격렬한 자살 폭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소말리아는 현재 서방이 지원한 에티오피아군이 몰려난 뒤 저항 세력들이 분점하고 있다.

수도과 남부 대부분을 통치하는 샤바브 민병대는 자신의 옛 동맹 이슬람법정연맹을 몰아내고 싶어 한다.

이슬람법정연맹은 대중 반란으로 정

권을 잡았지만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군에 의해 쫓겨났다.

지금 소말리아는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 UN은 전쟁 난민 1백 30만 명을 포함해 약 3백6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번역 조명훈 기자

아프리카의 뿔

에티오피아·지부티·소말리아 3개국을 포함하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축칭. 지부티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이슬람법정연맹

1991년 내전 발생 후 나타난 이슬람주의 단체. 원래 중앙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할 지역 법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고 무장력을 갖춘 사실상의 국가 기구로 발전했다.

중국 혁명 60주년

민족해방 혁명이 어떻게 시장경제로 향하게 됐는가

2009년 10월 1일 중국 혁명 60주년 기념식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빛이 바랬다. 그날 TV에서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를 소개할 때 내 머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맴돌아치고 있을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후 전 세계 해고 노동자 중 절반(약 4천만 명)이 중국 노동자이고, 행여나 이들이 기업식당 앞에서 시위를 벌일까 봐 공산당 정부가 탱크까지 배치한 마당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의 무능과 부패에서 인민을 구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감동을 줄까? 티베트와 신장이 사실상 계엄 상황인데, 중국의 해방이 전 세계 피억압자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등불이냐는 주장은 또 어떤 의미일까? 더구나, 마오쩌둥 시대에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대중의 큰 희생을 낳은 정치·사회적 재앙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의 일부, 혹은 전부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1949년 중국 혁명의 의의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혁명?

우익뿐 아니라 일부 좌파는 모든 혁명을 폄하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 혁명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이 쓴 ‘새로운’ 중국사를 보면, 19~20세기 중반 중국은 서구 ‘선진국’의 ‘진술’로 역동적 세계시장에 편입되고, ‘중도’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정당들의 탄생으로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지저분한 폭력 문화에 사로잡힌” 몇 년 전 출판된 영향력 있는 중국 혁명사 책의 표현 — 공산당이 농민과 함께 혁명이라는 ‘편편’을 쳐서 애초의 올바른 길에서 이탈했고, 1979년 시장개방을 통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학에 바탕을 둔 이들의 상상 속 역사와 달리, 당대를 살았던 중국인들에게 세계시장 편입과 서구 국가의 진출은 점진적 진보와는 거리가 먼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당시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들이 청나라에 IMP식 부채 상환 압력을 가해 청나라가 자연재해에 대응을 못 하면서 농민 1천 5백만 명이 수해로 목숨을 당했고 — 마이오 데이비스는 이 사건을 제국주의 체제가 낳은 ‘후기 빅토리아 시대 홀로코스트’ 중 하나로 꼽았다 — 민중은 지주와 고리대금업자들의 초착취로 “한 끼 먹고 한 끼 굶는” 고통을 받았고,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군사 침략은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1937년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에서 만 약 30만 명이 살해당했다). 중국 자본가 정당인 국민당은 구제제 세력과 제국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민중과 손을 잡지는커녕, 그들을 두려워한 탄압했다.

따라서 중국 민중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공산당과 함께 구제제 세력과 제국주의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 승리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중국 혁명은 1950년대 폭발한 베트남 민족해방 운동을 비롯해서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에 큰 타격을 입힌 많은 반식민지 투쟁을 고무한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다.

민족주의 혁명의 한계

그럼 왜 이 위대한 혁명이 60년이 지난 오

늘 그토록 퇴색하게 됐는가? 그것은 혁명이 애초부터 가진 근본적 한계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앞에는 두 가지 다른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국제적 착취·경쟁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극복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당연히 이것은 국제적 혁명 과정의 일부가 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구세력을 척결한 후 중국 스스로 근대 자본주의 산업을 건설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1930년대 이후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중국 혁명은 급진적 민족주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1920년대 중국 노동자 혁명이 패배한 결과였다. 1920년대 중국에는 비록 아직 소수였지만 연안 공업 단지에 집중되고(상하이에는 노동자 1천 명 이상이 고용된 공장이 50여 개가 있었다) 정치적으로 각성한 노동계급이 있었다. 보통 당시 노동자들의 다수가 농촌 출신이었던 점을 근거로 삼아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았다고 폄하한다. 그러나 노동자 탄압에 앞장선 국민당 장교조차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인정했다.

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한 초기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트로츠키와 레닌의 ‘연속혁명’의 영향을 받아 중국 혁명을 러시아 혁명을 포함하는 세계 혁명의 일부로 생각하는 국제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의 투쟁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스탈린이 장악한 코만테른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 1925년 5월 30일 상하이 조계에서 영국군에 혁명사 책의 표현 — 공산당이 농민과 함께 혁명이라는 ‘편편’을 쳐서 애초의 올바른 길에서 이탈했고, 1979년 시장개방을 통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학에 바탕을 둔 이들의 상상 속 역사와 달리, 당대를 살았던 중국인들에게 세계시장 편입과 서구 국가의 진출은 점진적 진보와는 거리가 먼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당시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들이 청나라에 IMP식 부채 상환 압력을 가해 청나라가 자연재해에 대응을 못 하면서 농민 1천 5백만 명이 수해로 목숨을 당했고 — 마이오 데이비스는 이 사건을 제국주의 체제가 낳은 ‘후기 빅토리아 시대 홀로코스트’ 중 하나로 꼽았다 — 민중은 지주와 고리대금업자들의 초착취로 “한 끼 먹고 한 끼 굶는” 고통을 받았고,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군사 침략은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1937년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에서 만 약 30만 명이 살해당했다). 중국 자본가 정당인 국민당은 구제제 세력과 제국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민중과 손을 잡지는커녕, 그들을 두려워한 탄압했다.

따라서 중국 민중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공산당과 함께 구제제 세력과 제국주의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 승리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중국 혁명은 1950년대 폭발한 베트남 민족해방 운동을 비롯해서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에 큰 타격을 입힌 많은 반식민지 투쟁을 고무한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다.

당시에, 게릴라전이 주된 활동이 되면서 당의 결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 군사적 고려가 더 중요해졌고, 지도자와 다른 정치적 견을 가진 당원에게 ‘반혁명 분자’임을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각종 ‘정풍 운동’과 지도자



시장 경제 하 중국의 엄청난 불평등 — 오늘날 상하이

승배 캠페인이 주기적으로 벌어졌다.

이런 변화는 공산당과 대중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산당은 여전히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기층의 압력에 밀려 — 1946년 이후 토지 개혁의 급진화가 대표적 사례 — 중국 민중의 요구를 대변했다. 그래서 국민당과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에게는 도시 노동자뿐 아니라 주요 동원 기반이었던 농민조차 상명하달식 지도의 대상이었지 스

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1949년 이후 수립된 중화 ‘인민’ 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산당은 여전히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기층의 압력에 밀려 — 1946년 이후 토지 개혁의 급진화가 대표적 사례 — 중국 민중의 요구를 대변했다. 그래서 국민당과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에게는 도시 노동자뿐 아니라 주요 동원 기반이었던 농민조차 상명하달식 지도의 대상이었지 스

그들은 선진 제국주의 열강과 군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였다 — 이것은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진정한 문제는 정체가 아니라 사회의 부가 군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공업으로 편중되고 보통 사람들의 필요가 무시됐다 는 것이다. 한때 전체 공업생산에서 중공업 대 소비재 산업의 비율이 75 대 25에 이르기도 했다. 또, 중국 혁명이 ‘농민 혁명’이었다는 흔한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농업 투자가 철저히 무시돼 농업 성장률은 매년 겨우 1.4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정권 초기에는 상황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 공산당 정부는 혁명을 성공시킨 대중의 지지와 열망에 일정 정도 부응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임금·노동조건·보건·교육·농업 지원 모두 상당히 진보했다. 그러나 냉전 시대 제국주의 열강과의 경쟁이 격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에 민족주의적 방식, 즉, 부국강병으로 맞서기로 결정하면서 체제의 우선순위를 명백히 중공업 축적으로 돌렸다. 마오는 이 전략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다. 우리도. 그것최고신 수기을 가져야 한다. … 미사일이 든, 핵폭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저들이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결국 중국 사회는 다른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경쟁적 축적에 종속된 사회가 됐다. 다시 말해 당시 중국은 자본주의였다. 다만, 주된 경쟁 형태는 세계시장에서 상품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열강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공업 축적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을 포함한 공산당 관료들은 사회의 필요를 충족에 종속시키는 구실을 하는 존재, 즉 관료적 자본가 계급이었다.

그들은 선진 제국주의 열강과 군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고 희생을 강요했다. 예컨대, 노동자들을 정규직·반(半)정규직·비정규직 — 정식 용어는 이와는 달랐다 — 으로 나누고 복지와 임금을 차등 지급해, 시장자본주의에서 보통 노동시장과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경쟁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일상적 고통뿐 아니라 때로는 희생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대약진 운동이나 수백만 명이 정치적 박해를 받은 ‘문화대혁명’ 이 그랬다.

그러나 이런 마오주의적 경쟁 전략은 부분적 성공을 거뒀을 뿐이다. 중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임금·노동조건·보건·교육·농업 지원 모두 상당히 진보했다. 그러나 냉전 시대 제국주의 열강과의 경쟁이 격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에 민족주의적 방식, 즉, 부국강병으로 맞서기로 결정하면서 체제의 우선순위를 명백히 중공업 축적으로 돌렸다. 마오는 이 전략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다. 우리도. 그것최고신 수기을 가져야 한다. … 미사일이 든, 핵폭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저들이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결국 중국 사회는 다른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경쟁적 축적에 종속된 사회가 됐다. 다시 말해 당시 중국은 자본주의였다. 다만, 주된 경쟁 형태는 세계시장에서 상품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열강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공업 축적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을 포함한 공산당 관료들은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구실을 하는 존재, 즉 관료적 자본가 계급이었다.

그들은 선진 제국주의 열강과 군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고 희생을 강요했다. 예컨대, 노동자들을 정규직·반(半)정규직·비정규직 — 정식 용어는 이와는 달랐다 — 으로 나누고 복지와 임금을 차등 지급해, 시장자본주의에서 보통 노동시장과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경쟁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일상적 고통뿐 아니라 때로는 희생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대약진 운동이나 수백만 명이 정치적 박해를 받은 ‘문화대혁명’ 이 그랬다.

그러나 이런 마오주의적 경쟁 전략은 부분적 성공을 거뒀을 뿐이다. 중국은 1960년대 이후로는 미국뿐 아니라 소련과도 대결해야만 했는데, 아무리 노동자와 농민을 쥐어짜도 냉전의 양대 초강대국과 겨룰 수 없는 군사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 심지어, 중국의 경쟁력은 이 초강대국들의 ‘위성국’들과 비교해도 별로 낮지가 않았다. 예컨대, 당시 일본·한국·대만의 전력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다. 우리도. 그것최고신 수기을 가져야 한다. … 미사일이 든, 핵폭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저들이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투쟁들을 포함하면, 이것이 2000년대를 묘사한 것인지 국민당 정부 말기를 묘사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모든 파악업·파착취 집단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산당 정부는 옛 국민당 정부와 다르다. 제국주의에서 중국을 해방시켰다는 민족주의적 정당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또, 모순은 있지만 고도성장으로 일자리 확대와 최소한의 생활수준 향상이 지속해 왔고, 경제 성장으로 많은 혜택을 입은 집단(민간 자본가, 중간 계급의 일부 등)을 정치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명백하다.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 최근 한족들의 위구르족 공격은 이 점을 명백히 보여 줬다 — , 1990년대 이후 공산당 정부가 민족주의 카드를 통한 한 꺼냈음에도 집단시위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는 없었다(1993년 8천7백 건에서 2008년 18만 건으로). 체제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듯이 보였던 상층 계급 포섭은 일단 부패 스캔들로 집이 되고 있다. 또, 아마도 통제 정당성의 가장 강력한 근거인 고도 성장 신화가 끝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엄청난 규모로 경기 부양 정책을 폈음에도 “더블딤이 발생하면 진원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측이 정말로 실현될지, 혹은 언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부양책의 일차적 혜택이 자본집약적 산업과 건설업으로 가기 때문에 설사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7~8퍼센트의 성장률을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 이조차도 지난 20년간 평균성장률에 비해 1~2퍼센트, 2007년에 비해 2~3퍼센트 낮은 수준이다 — 충분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 정부는 경제 위기의 정치적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최근 중국의 국 사회 연구자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보고된 ‘집단행동’ 사례를 수집한 후, (정부의 압력을 받은) 중국 언론의 호들갑, 계절적 수요와 아직 상당수의 실업 농민공이 농업 지역에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 결합된 것이다.

누구의 말이 옳든,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이미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이것은 당연히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쫓겨난 도시 거주민들, 3. 동북구 폭동과 정부와 대학 당국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서 폭발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댜안먼 광장을 피로 물들인 후 국영 기업 노동자 4천만 명을 해고하고 농촌 복지를 삭감하면서 중국을 세계시장에 밀접히 통합할 수를 주도형 경제로 바꿔 나갔다.

- 민영화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적절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깎이고 노동조건이 불안정해진 국영기업과 집체소유 기업 노동자들.
- 고위 관료와 결탁한 개발업자들에게 의해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쫓겨난 도시 거주민들.
- 동북구 폭동과 정부와 대학 당국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서 폭발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댜안먼 광장을 피로 물들인 후 국영 기업 노동자 4천만 명을 해고하고 농촌 복지를 삭감하면서 중국을 세계시장에 밀접히 통합할 수를 주도형 경제로 바꿔 나갔다.
- 특정 업종의 종사자들, 특히 택시 운전사·교사·세발자전거 운전사·상인 등 자신의 특정한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투쟁하거나,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특정한 법규들에 항의하는 사람들.
- 임금 체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농민공’ (농촌 이주 노동자).
- 중국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전하는 파룬궁 회원과 기타 정치적 반대파들.
- 관료들과 기업가들이 토지를 갈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항의하는 농민들.

여기에 티베트와 신장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투쟁들을 포함하면, 이것이 2000년대를 묘사한 것인지 국민당 정부 말기를 묘사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모든 파악업·파착취 집단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산당 정부는 옛 국민당 정부와 다르다. 제국주의에서 중국을 해방시켰다는 민족주의적 정당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또, 모순은 있지만 고도성장으로 일자리 확대와 최소한의 생활수준 향상이 지속해 왔고, 경제 성장으로 많은 혜택을 입은 집단(민간 자본가, 중간 계급의 일부 등)을 정치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명백하다.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 최근 한족들의 위구르족 공격은 이 점을 명백히 보여 줬다 — , 1990년대 이후 공산당 정부가 민족주의 카드를 통한 한 꺼냈음에도 집단시위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는 없었다(1993년 8천7백 건에서 2008년 18만 건으로). 체제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듯이 보였던 상층 계급 포섭은 일단 부패 스캔들로 집이 되고 있다. 또, 아마도 통제 정당성의 가장 강력한 근거인 고도 성장 신화가 끝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김용욱 기자 | chorange@kett21.com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⑥

저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영국 뉴캐슬대학교 역사학 강사인 **맷트 페러**는 유사 이래 지배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지배가 당연하다고 납득시키려고 과거를 신비화했으며, 왕조의 계보 같은 최초로 기록된 역사는 지배자들의 정통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한다.

아서 왕 집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착취를 일상적 어인 어, 저는 당시에만 투표한 적도 없는데요. **아서 왕** 왕은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서 왕** 반쪽이는 금실 비단으로 뒀인 호수의 여신의 딸이 호수 한복판에서 엑스칼리버를 높이 들어올리嘛, 바로 나 아서가 엑스칼리버를 가지는 것이 신의 뜻을 알리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네가 너희들의 왕이다. **맷리스** 이보시오, 물 속에 누워 칼이나 나눠 주는 이상한 여자를 근거로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지요. 최고 권력은 시시한 수중 쇼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 **‘몬티 파이산과 생배’** [1975년작 영화 **중에서**

오늘날 과거에서 정통성을 찾는 체제는 주로 국민국가이지 왕정이 아니다. 그 래서 BBC방송은 [7월절 3100년부파의 천년왕국운동과 1백 년이 지난 뒤 벌어진 독일 농민전쟁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적에 맞서 목시문적 전투를 예연한 지도자들이 하층민을 고무했다. 영국 내전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적 인 혁명을 꿈꾸었다.

목시문

그러나 이런 혁명의 시기에 종교 사상은 세속의 정치 사상이나 민주주의적 미해상, 심지어는 다거시영국 내전 당시 재산공유제를 지지한 급진적 농민들)와 그 지도자였던 제라드 윈스턴랜에서 보듯 공산주의적 미래상과 뒤섞였다.

사회적 갈등을 통해 오늘날의 세상이 탄생했다. 16~18세기에 발생한 네 번의 위대한 혁명 — 네덜란드 독립전쟁, 영국 내전,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 — 과 그 여파로 유럽과 미국의 정치·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자본이 세계를 정복한 20세기에는 세계대전과 파시즘, 인종 학살, 스탈린주의, 환경 파괴와 핵무기라는 전에 없는 재앙이 일어났다. 자본주의 덕분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발전이 지속될 거란 19세기의 믿음은 무색해졌다. 동시에 20세기는 세계 노동계급이라는 역사상 가장 변화적인 주체가 탄생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지배자들이] 가장 지배하기 힘든 시대였다. 거의 10년에 한 번씩 곳곳에서 혁명이 발생했다. 총파업, 공장 점거, 식민지배에 맞서는 반란이 발생했다. 선거권 정치 운동과 인종·성 억압에 반대하는 운동이 등장했다. 가난한 농민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소요를 일으키고 토지를 점거했다. 이러한 대중 투쟁으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의를 뛰어넘는 미래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겨났다.

이런 역사는 교과서와 TV에 나오지 않는 역사다. 이런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만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질 스콧 해룬의 노래 가사를 빌려 결론을 내리자면, ‘만약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려 하면! 그들은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할 거야! 나사나! 단, 왕후장상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반제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8년 1월호 번역 천형석

이 주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탐구하고 싶은 독자들은 <민중의 세계>(크리스 하먼, 책피레)와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책피레)을 읽어 보시오.

종합

YH노조 김경숙 열사 30주기

한국 여성 노동자 투쟁의 빛나는 역사

올해는 YH노조 투쟁의 주역인 김경숙 열사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이 투쟁은 박정희 군사독재 하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지를 보여 준 역사로 남아 있다.

1970년대 유신체제에서 10~20대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장시간 노동과 열흘 이상의 철야 노동을 강요받고 휴일에도 일했다. 소변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물 마시는 것도 통제했다. 그러고도 버스비가 30원이던 시절 2만 원도 안 되는 박봉에 시달렸다. 하루만 결근해도 해고당하고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그들은 사장만이 아니라 유신체제와 어용노조 한국노총과도 맞서야 했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억압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단지 “불쌍한 어린 소녀들”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운 여성 노동자”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썼다. 삼원섬유 여성 노동자들은 어용노조를 세우려는 야비한 술수와 노동자들의 투쟁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하려는 경찰의 끈찍한 매질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풍물 사건’으로 알려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파업농성을 해산하려는 경찰들에 맞서 알몸으로 최후까지 저항했다. 콘트롤데이터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임신 퇴직을 없애고 유급 산전산후 휴가를 쟁취했고, 삼성제약 여성 노동자들은 유급 수유시간을 쟁취해 기혼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투쟁에 동참시켰다. 삼립식품 노동자들은 어용 노동조합 지도부를 거슬러 임금 인상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YH노조의 김경숙 열사도 이런 투쟁에 앞장섰던 투사였다. 가발 및 봉제품 수출업체였던 YH는 1966년 자본금 1백만 원에 10명 규모로 설립됐지만 4년 후에는 4천 명의 노동자를 거느리고 12억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냈

이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단지 “불쌍한 어린 소녀들”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운 여성 노동자”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썼다. YH노조의 투쟁은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투지를 불어넣었다.

다. 이것은 모두 여성 노동자들의 등골을 뽀아 이룬 결과였다. 노동자들이 해고를 감수하며 싸운 끝에 드디어 민주노조가 건설했다. 노조가 최초로 조직한 잔업거부 운동은 생전 처음 감동적인 추석보너스를 안겨줬다. 조합원 전원이 함께한 일요일 연장 거부는 이를 만에 해고된 동료들을 원직복직 시켰고, 여성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던 ‘부모사망 5일 휴가’를 요구해 여성차별적인 관행에도 맞섰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이 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노조가 성장하자 사측은 갑자기 공장을 이전하고 휴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는 당시 YH가 하청기업을 5개나 거느리며 작업물량을 하청으로 빼돌렸고,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며 싸웠다.

그러나 경영진들의 계속된 자금 빼돌리기와 사업확장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결국 폐업 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노조는 부실의 책임자인 장용호 회장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를 거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 이들의 투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 줬다.

리로 내모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전 조합원이 폐업 반대 농성에 참여해 5일 만에 정부와 사측으로부터 폐업철회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백일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신민당사 농성

결국 노동자들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정당한 요구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지지를 이끌어 냈다. 지지 확산이 두려웠던 경찰은 농성 이를 만인 1979년 8월 11일 새벽에 농성장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1백여 명이 부상하고 노조 대의

원인 김경숙이 사망했다. 경찰은 비열하게도 김경숙 열사가 “작전 개시 30분 전에 스스로 동맥을 끊고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조사 결과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다. YH노조의 투쟁은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투지를 불어넣었다. 이 사건은 부마항쟁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의 숨통을 끊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당시 YH노조 사무국장이었던 박태연 씨는 30주기 열사 추모 다큐멘터리에서 “그때 당시 농성했던 경험은 정말 훌륭했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간들 그런 홀

륭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까 싶어요” 하고 말했다. 실제 이 투쟁은 당시 참여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학교였다. 이 ‘학교’의 ‘졸업생’인 YH노조 초대 위원장 최순영 씨는 민주노동당 초대 국회의원이 됐고, 그때 농성에 참여했던 조합원 다수가 지금도 여성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1970년대 그들의 투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여성 노동자 개개인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단결해서 싸울 때 이 모순투성이 사회를 바꿀 힘을 발산해 낸다는 것이다.

류민희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

쌍용차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앞날이 그렇다. 이미 해고당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1차 대량 해고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조차 고용 보장이 불확실하다.

또, 경제 회복의 조짐이 있다고는 하나, 기껏해야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을 통한 자산가치 거품일 뿐이어서 머지않아 지금보다 더 재앙적으로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고용 보장 대안 마련은 진보진영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에서 “부도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해 왔다. “부도·파산 위험에 있는 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www.left21.com)

그러나, 쌍용차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진보진영은 대체로 공기업화(국유화) 요구에 부정적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마 봉고 이전 옛 소련 블록에서 스탈린주의가, 서구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도입한 관료적 국가 소유의 부정적 경험 때문인 것 같다. 이 때문에 국가를 믿고 지역적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주의 등). 이것은 전략으로서도 가망 없고 당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또한 공기업화 자체를 모종의 사회주의적 조치로 이해하는 경향과 관계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기업화를 반대한다. 그 반대 편에는 공기업화 자체를 사회주의라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추진하는 국유화를 “21세기 사회주의”의 증거라고 본다. 노동자 혁명 없이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 국유화를 통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옛 소련 블록의 붕괴에서 보듯이 재앙적이다.

공기업화 자체는 사회주의적 조치가 아니다(근본적 사회 변혁을 통해 등장한 노동자 국가는 필수적으로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겠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다).

공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와 괴립돼 있지 않다.

가령, 가스와 전기의 수요는 사적 자본주의의 경제 상태에 의존한다. 자동차·철강·기계 등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과잉생산돼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경제 불황이라면 가스와 전기

수요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또, 가스와 전기 가격의 한도는 국제 자본가들의 경쟁에 의해 직간접으로 결정될 것이다. 자동차 수출업자, 기계류 수출업자, 선박 건조업자 등은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 압력이 가스와 전기의 가격을 기본적으로 결정한다.

임금 하락 압력이 강화되면 이들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즉, 공기업 경제 부문도 전체 경제의 일부다.

무상물수

사실, 20세기 초 국유화는 국가 개입이 자본 축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자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 다(힐퍼딩, 부하린, 레닌은 20세기 초 대규모 국유화의 이런 맥락을 간파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로버트 트레슬의 소설 《누더기 바지 박애주의자들》(실천문학사)에도 1906년에 가스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린 전기 회사가 공기업되는 과정이 흥미롭게 묘사돼 있다).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자체의 해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교리(케

인스주의)가 새로운 정설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다. 기업이 파산하도록 놔둔다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다.

다른 경쟁 기업이 파산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대량 해고는 피할 수 없다. 쌍용차는 경쟁 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이미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공적자금 투입도(그것이 설령 일시적 공기업화 효과를 낼지라도)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의 풍자는 그 까닭을 잘 보여 준다. 루비니는 지난해 부시 정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자 다음 같은 논평을 냈다.

“부시 동지, 폴슨 동지, 버냉키 동지는 지금 USA를 USSRA(the United Socialist State Republic of America, 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로 바꾸었다. 사회주의는 정말이지 살아 있고 미국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 명문가, 월스트리트를 위한 사회주의다. 이윤이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돼 미국 납세자들이 3천억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사회주의다.”

쌍용차 투쟁에서 자본가들의 손실을 노동자·서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공적자금 투입 요구(일시적 공기업화)가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보상 없는, 즉 무상물수) 공기업화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국제적·역사적 경험상 공기업화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마저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기업의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방어와 함께 그 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부도기업의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가 아니다. 무엇보다, 세계 지배자들 자신이 경제의 재앙적 붕괴를 두려워 해 얼마간의 국가자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운동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공기업화를 통한 부도기업의 노동자 고용 보장 대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김민식 | kis@left21.com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조삼모사식 기만”일 뿐일까?

14호 독자편지에서 김영익 동지가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우편향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친서민 정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면극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가면극은 올해 이명박 정부의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산 참사 항의시위, 6월 10일 수만 명의 시위, 77일간 이어진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 등 저항이 계속 됐기 때문이다.

등록금 문제는 비단 대학생들뿐만 아

니라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돼 있다. 이명박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 국민적 걱정거리인 등록금 문제에 약간이라도 ‘양보’를 내놔야만 했다. 물론 이것 역시 여타 ‘친서민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엔 불과하지만 당장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이 언제라도 미봉책에 가까운

이번 ‘양보’마저도 철회할 수 있다는 김영익 동지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양보’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 한 것은 아니다. 좌파는 이명박의 보잘것없는 ‘양보’마저도 아래로부터의 불만과 저항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등록금 인하와 같은 더 큰 ‘양보’를 위한 운동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정부가 미약한 ‘양보’마저도 철회하려 할 때, 대중적 분노를 모아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강영만

‘진보적 애국주의’ 기사 비판에 대한 답변

천경록 동지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 서술 방식이 다소 일면적이고, 이데올로기 비판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초좌파적으로 보일 부분이 있던 것 같다. 특히 현실에서 운동이 종종 입헌적 근거에 호소한다는 점, 급진 공화주의에 공명하는 청중과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에 감사한다.

그럼에도 몇 가지 단서를 달고자 한다.

천경록 동지는 내가 “장은주 교수의 주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나는 장은주 교수의 주장이 애국주의 일반을 좌파가 독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서술하지 않았다.

장은주 교수는 우파의 애국주의를 침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헌법 애국주의’를 제시했고, 나는 그 ‘헌법 애국주의’가 언제나 좌파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천경록 동지가 나의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서술이 “공화주의 이념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 삼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한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현재 민주공화주의 논의들 중 일부가 북한 문제, 자

본주의의 적극 승인, 사적 소유권의 적극 승인 등과 연관된 ‘대한민국 정체성’ 긍정 문제와 연결된 측면들이 있어서 양상은 좀더 복잡한 듯하다. 물론 내가 민주공화주의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이 점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경록 동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천경록 동지가 주장하듯이 “우파가 생각하는 애국과 촛불시위자가 생각할 법한 애국은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천경록 동지가 주장하듯이 어떨 때는 우파의 애국주의와 충돌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예를 들어 민중의 반일 민족주의를 탄압한 중국 지배자들의 민족주의 사례, 박정희의 애국(민족)주의와 충돌한 민중 민족주의 등 수많은 사례들이 그렇다.

그러나 “국익”이라고 했을 때 한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바로 그 점이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동시에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치 좌파 민족주의, 또는 민중적 민족주의가 결정적 국면에

서 개혁주의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장은주 교수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의 틀 안에서 그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수호하고 그것이 정한 수단과 절차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보적 애국주의의 실천”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이명박식 ‘법치’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항 운동에 체제내적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좌파가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를 차용한 저항 운동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이데올로기 자체를 추수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물론 당연히게도 이 점이 천경록 동지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좌파 애국주의의 모순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필요하다면 ‘애국’의 언어를 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혼란을 자아내거나, ‘애국주의’에 너무 타협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규한

‘겉만 번지르한 정운찬 포장지 내각의 실체’ 기사를 읽고

9.3개각에 대해 개혁주의 언론들은 “흙쥌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돋보이는 인사”(9월 3일, <한겨레> 칼럼)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정운찬이 이명박 정권에 합류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모종의 기대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개혁주의 언론들과 비교할 때, <레프트21> 14호 “겉만 번지르한 정운찬 포장지 내각의 실체”를 폭로한 기사는 단연 돋보였다.

무엇보다 “알맹이는 이명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운찬의 행적을 조목조목 폭로한 것이 좋았다. 특히 그의 ‘유연한 호환성’을 들춘 내용은 ‘학자적 소신’은 고사하고 그가 앞으로 “정치인으로 출세를 모색”에 치중할 것이라 예상하기에 충분했다.

개혁주의 언론과 중도 지식인들이 정운찬 입각에 대해 실망감과 미련을 나타내는 것과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다른 듯하다. 9월 6일 여론조사에서 이명박과 정운찬의 견해차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47.8퍼센트가 응답했고, 이명박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49.2퍼센트가 응답해, 정운찬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에 대항마로 생각하며 정운찬에게 구애했던 민주당만큼은,

“뒤틀통수 맞은 느낌”이라며, 이명박과 정운찬 중 “누가 소신을 굽힐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보수 언론들도 “가시 돋친 장미를 품은 격”이라며, 정운찬의 개혁적 이미지를 불편해 했다. 그리고 이명박의 우파 분석과 정운찬의 개혁적 이미지의 충돌을 우려했다.

그러나 우파들도 이제는 “4대강·감세·한미FTA 등 교수시절엔 비판하다 지지·용인 쪽으로 선회”했다며 “정운찬의 변신”(〈조선일보〉)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레프트21> 14호에서 “한나라당에서 충청 맹주를 차지하며 대권을 노린다는 정운찬의 구상은 이후 인기 없는 이명박과 선을 긋고 충돌할 수 있는 불씨를 담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 앞선 추측이 아닌가 싶다.

당장에 ‘세종시’ 문제로 충청권에서 ‘매향노’로 내몰린 그의 처지는 “충청 맹주”를 차지하기보다는 MB의 굶은 일을 대신하는 하수인으로 보일 뿐이다.

끝으로 써여문드러진 내각의 알맹이에 대해서도 더 부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서민정책이 MB노믹스의 근간”이라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강만수의 복귀와 투기, 세금탈루, 아들 병역비리

등이 드러난 여성부 장관 후보 백희명은 ‘강부자’ 내각의 분석을 보여 줬다.

MB시계를 차고 청문회장에 나타난 국장부장관 후보 김태영이 임진강 참사가 북한 때문이라며 목청을 높였지만 정작 “정확히 수공(水攻)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는 발언도 가관이었다. “인생 선배” 강만수를 둔 덕에 ‘MB노믹스의 핵심’인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 윤진석이 기용된 것도 말을 잃게 한다.

부패와 오물투성인 자들의 면면을 볼 때, 중도실용 내각이란 말은 무색하고 ‘강부자’ 내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명하

답변

세종시에 대한 태도로 정운찬이 충청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노무현이 공약한 세종시는 완성되도 민주당의 성과가 될 가능성이 컸다. 이명박도 정운찬도 여전히 지역주의 악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온갖 비리 투성이었던 이회창과 ‘전과 14범’의 이명박도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됐는데 정운찬의 앞날을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편, 기사가 나간 후 청문회 과정에서 폭로된 사실을 기사에 미리 담았어야 했다는 지적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비정규직 강사들은 전임교원처럼 일하고 있다

14호에서 이현주 기자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이하 ‘강사’들의 열악하고 불공정한 처지에 대해 잘 고발해 주었다. 다만, 강사들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정규직화 요구를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 점에는 이견이 있다.

기자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강사들은 주 3~6시간만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사들의 주 1시간 수업은 주 3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보아야 한다. 강사들은 1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의를 위해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준비와 연구를 한다. 강의만 보아도 그렇지만, 강사들은 그 외에도 학회 활동이나 논문 제출 등 연구 활동과 학생 평가,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상 전임교원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도 강의 준비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인정하며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낸

강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업무상 전임교원과 다른없는 강사들의 정규 채용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 해고 사태만 낚는 비정규직보호법과 이 법을 악용하는 대학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박연오

답변

박연오 씨의 주장처럼 강사들의 주 1시간 수업을 주 3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봐야 한다. 황당하게도 대학당국들은 지금껏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이를 악용해 이번 해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했다.

강사를 일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 듯하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디링케의 작센 주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인가

<레프트21> 14호에서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약진’ 기사를 재미있게 잘 보았다.

그런데 작센 주에서는 그럼 얼마나 얻었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더니 작센 주에서는 20퍼센트 조금 넘게 받은 걸로 되어 있던데 선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

한 외신에서도 작센하고 튀링겐에서는 예측된 결과였는데, 살란트의 경우 인상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었다. 그럼 작센 주에서 지지율이 튀링겐만큼 나오지 않아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류민희

답변

2004년 작센 주 의회 선거에서 오늘 날 디링케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민주사회

당(PDS)은 23.6퍼센트를 득표했다. 디링케는 2004년 선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 3퍼센트, 표수로는 약 1만 9천표를 잃었던 것이다. 2009년 작센 주의회 선거 결과 분석을 보면, 이 사라진 1만 9천표는 대부분 사민당(SPD)으로 이동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전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SPD는 작센 주에서 기민련(CDU)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립 정부는 주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주택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작센 주 디링케 지도자들이 공공주택 사유화를 지지하지 않고 일관되게 반대했다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살란트와 튀링겐처럼 표를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김용욱 기자 | ohotonge@left21.com

아프간 전쟁 기사의 번역에 대해

지난 14호 기사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러시아 제국의 무덤이 됐는가’(원문은 How Afghanistan became the graveyard of the Russian empire, http://www.socialistworker.co.uk/art.php?id=18929)의 번역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소련 특전사”라고 번역한 부분의 원문은 “russian special forces”이다. ‘특전사’는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줄임말로 고유명사이므로, 러시아의 ‘special forces’는 보통명사인 ‘특수부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게릴라군은 … 점령군과 전면전을 벌이려 하지 않는다”에서는 “set piece battle”을 ‘전면전’으로 번역했는데, 올바른 번역은 ‘정규전’이다. ‘전면전’은 전쟁(war)의 한 형태로 ‘국지전’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정규전’은 전투(battle)의 한 형태로 ‘비정규전’(흔히 게릴라전)과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혼동해선 안 된다.

조형석

쌍용차 투쟁 구속자가 보내온 편지

레프트 미디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쌍용차 연대 투쟁으로 연행돼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프트21>을 보내 주신 덕에 여러 가지 소식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구속돼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용기 잃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레프트21> 분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잘 지내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박정민

학생 운동

고려대학교 학내 민주주의 억압

고려대에서는 MB 비판하면 안 된다?

최근 고려대 당국은 환경 미화를 명분 삼아 학생들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학생들은 이에 줄기차게 항의했으나 학교는 묵살했다. 그러나 9월 9일 학생대표자들이 교육환경개선요구안을 학생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현수막을 철거한 진정한 이유가 드러났다.

학생처는 학생 대표자들이 항의하자 협의 전까지는 게시를 허가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수막을 걸기 전에 통보를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현수막 게시를 통보하자 “내용이 뭐냐? 김지윤 학생이 거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사전 검열이다. 심지어 대학생행동연대가 주최한 토론회 ‘2MB 불도저를 어떻게 멈출까 - 반MB운동의 전략과 전술’ 홍보물을 게시하면 장소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했다. 담당 교직원들은 결국 “MB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학생들도 암암리에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학교 당국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냈다.

고려대 당국의 학내 민주주의 억압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4.19 혁명 기념 행사에 이명박 관련 구호를 내걸면 정문을 막겠다는 경찰의 협박에 맞장구 치며 이명박 관련 구호를 내걸지 못하게 했다. 한 동아리가 주최한 진중권 교수 강연은 장소 담당 교수가 진 교수를 싫어 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당일 장소가 폐쇄됐다. 고려대에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토론회 장소를 빌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고 설사 빌리더라도 공개적 홍보를 거의 할 수 없다.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 분위기에 편승해 ‘MB고대’ 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MB고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김지윤 일명 ‘고대녀’, 대학생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



올해 4월에 열린 고려대 무기정학 규탄 기자회견

사진 이윤선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년의 천막농성 끝에 강의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우리는 즉각 무기정학 철회 캠페인을 벌였고 법원에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9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학교 당국은 무기정학을 소급적용한 이유에 대

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당국은 어떤 식이든 징계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면 “금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아직 재학 중이어서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상 학생들 상호간에 실질적인 형평을 상실하기” 때문에 졸업생들까지 징계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했다고 답했다.

결국 이번 무기정학 소급적용 징계는 학교 당국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우리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한 꼼수였다. 애초 법원

의 판단을 따르고 지난 징계를 무효로 처리하면 될 일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그러면서도 학교 당국은 이번 무기정학 징계가 “법이 추구하는 합리성과 형평성 도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다며 “대승적 교육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을 출교가 안 되면 퇴학, 그것도 안 되면 무기정학으로 바꿔서라도 끝까지 징계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태도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에 대해, 더군다나 3명은 이미 졸업까지 한 상태에서 왜 학교 당국은 끝까지 이른바 ‘빨간 줄’을 남기려 할까. 그것은 학교 당국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시위, 행동을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등록금 인상과 학내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출교 철회 투쟁의 올바른 마무리가 이런 불만을 저항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강영만 고려대 전 출교생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9월 17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교육단체들의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2년 연속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된 ‘공교육의 적’ 이명박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최다 수준이다. 초등 30.9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

에 비해 10명이나 더 많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 도심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훨씬 더 많다.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학급 중에는 아직까지 50명이 넘는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곳이 있다. 콩나물 시루 같은 학급에서 전인 교육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수업 시간 40분 동안 학생 한 명당 1분 눈 맞

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육적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저출산 때문에 교원 수를 동결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스스로 1만 6천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인턴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자기 모순을 드러냈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 놓은 정원의 90퍼센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포기 선언에 맞서 교대생들이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OECD 수준의 교원을 확보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예비 교사들의 실업을 해소할 것, 땀질식 비정규직 인턴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GDP 대비 6퍼센트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동시에 일제교사, ‘귀족 학교’ 설립과 같은 MB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도 표명하고 있다. 참교육 실현을 바라는 예비교사들은 25일 1만 명 규모의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이후 한 달간 릴레이 동맹휴업을 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붓고 부자들에게는 90조 원을 감세해 주면서 교육 여건은 내팽개치고 있다. 교육 예산 중에서도 교육 시설·복지 예산은 삭감한 반면, 영어 입시 교육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경쟁을 위해 공교육을 후퇴시키는 정부에 맞서 교육 공공성을 지키려는 예비교사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조익진 서울교대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는 이명박의 학문의 자유 공격의 상징이다. 문화관광부가 벌인 표적감사로 총장에서 쫓겨난 황지우 교수는 시간 강사로서도 강의하겠다고 강사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강의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시간강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황지우 전 총장은 방학 때 열린 ‘자유예술대학’에서 조차 학교 밖에서 강의해야 했다. ‘한예중 총학생회 학생 비상대책위’(비대위)는 학교 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학교가 공개한 ‘감사조치 이행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또 다른 표적감사의 대상인 심광현 교수에 대한 중징계 논의도 2학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심광현 교수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예중 당국은 비판을 억누르는 데 급급하다. 학교 당국은 심광현 교수 징계 반대 현수막 철거를 비대에 요구했다. 또 총학생회가 박종원 신임 총장 취임 축하에 정부 감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넣자 수정을 요구했다. 총학생회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 측은 축하를 아예 빼버렸다. 비대위의 지적대로 “한예중 사태는 현 정권 들어 연이은 ‘좌파적결 코드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황지우 교수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분노한 학생이 텐트 농성을 벌이는 등 한예중 학생들은 학문과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한예중 학생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김지윤 대학생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

종합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소유’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모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가 된 만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 총장 선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대 법인화는 1990년대부터 추진돼 왔으나 번번이 학내외의 반발로 좌초했다. 그러나 이명박 취임 직후부터 ‘대학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화 추진이 본격화했다.

교과부 차관 이주호는 서울대 법인화를 계기로 “나머지 국립대의 법인화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총대를 멘’ 서울대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재정 지원 등’ 특혜를 약속했다.

전체 대학(3백55곳)에서 국립대가 몇 곳(44곳)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곧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온 결과 현재 국립대들은 ‘국립대’ 간판을 달기 민망할 정도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GDP 대비 0.6퍼센트로, OECD 평균 1.0퍼센트의 절반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도 재정 중 국고의 비중은 4분



서울대 안팎에서 법인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임수현

의 1수준(2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민간부담률은 1.9퍼센트로 OECD 평균 0.4퍼센트의 4배에 이른다. 정부의 책임 방기로 생긴 구멍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왔다는 소리다. 그래서 한국의 사립대는 물론이고 국립대 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서울대는 10년 전보다 등록금이 2.5배에서 3배 가까이 올랐다.

‘재정 지원’을 명분으로 기업들도 국

립대에 은근슬쩍 발을 들여놓았다. 서울대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기술지주 주식회사(Seoul Techno Holdings, Inc)’를 설립해, 대학에서 개발한 연구, 기술, 지식을 상품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교육’, 즉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 제도를(영여강의 확대, 제2전공 의무화)도 도입했다.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그나마 남아있

던 공공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이런 과정을 훨씬 더 노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교과부 차관 이주호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을 줄 일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이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교과부는 내년 교육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6.9퍼센트나 삭감했다.

결국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덩달아 “현재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절반으로, 그나마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막아온 것인데 서울대 법인화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물꼬를 터”줄 것이다.(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교직원들의 처우도 나빠질 것이다. “요즘도 전기·수도·난방·가스·전화·다외주 용역”을 쓰는 마당에, “법인화되면 당연히 [교직원 임금] 삭감하지 않겠는가.”(배진수 서울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서울대 총장 시절 법인화를 강력히 추진해 온 정운찬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말하자면 사립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커다란 기업이 되는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요컨대 정부가 법인화 명분으로 내세우는 ‘자율성 확보와 획기적 재정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공공성으로부터의 ‘자율’과 학생·학문을 수단으로 하는 ‘획기적 돈벌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1일부터 사흘간 ‘법인화 찬반 학생 총투표’를 진행한다. 총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데도 정부가 법인화를 강행한다면, 동맹휴업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의료, 수도, 철도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모든 것을 시장에 팔아 넘기려는 흐름의 일부다. 교육 공공성을 파괴할 서울대 법인화를 막아야 한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종파주의 비판

민주당·개혁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는가

올해 상반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공격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지 않으면서 특정 사안을 놓고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예컨대 1917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우익 장군 코르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정부인 케렌스키와 함께 코르닐로프에 맞섰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이 과정에서 “케렌스키를 코르닐로프를 맞출 총의 조종대로 사용하자. 케렌스키는 나중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동요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면서 이명박을 맞출 ‘총의 조종대’로 이용하는 전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비판을 자제하면서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추수하는 인민전선적 동맹을 추구했다. <레프트21>과 ‘다함께’는 이런 인민전선적 동맹이 노동자·민중의 힘과 사기를 떨어뜨리며 이명박 정부가 개악을 강행할 수 있는 틈을 제공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은 인민전선적 동맹뿐 아니라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 등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 전술 수준에서까지 일관되게 반대”(가자! 노동해방) 37호)한다는 사노련은 민주당과의 공조에 연연하는 개혁주의 단체들(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자본가당과 어울리며 이중대 노릇이나 하는 가짜 노동자당”이라며 연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아가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은 안 되지만 불가피할 때 전술적 제휴는 가

능하다’는 ‘다함께’도 비판한다. “최대강령(전략적 과제)과 당면 투쟁을 분리시키는 ... 기회주의가 바로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론에 깔려 있는 본질”이며 ‘다함께’는 “인민전선 세력의 힘을 복돋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생산 통제, 노동자 정부 구성’ 등 최대강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개혁주의자들과 과도 연대할 수 없고, 개혁주의자와 연대하는 ‘다함께’는 기회주의라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처럼 “어떤 것이든 타협 일반의 허용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진지하게 고려하기조차 어려운 어리석은 짓”(《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레닌은 “볼셰비즘의 온 역사가 유연한 대응, 협조, 부르주아 정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과의 타협의 사례로 가득 차 있음”을 강조한다.

정치적 무능력

민주당은 이명박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추구하는 자본가 정당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들과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진 않는다. 레닌이 말했듯이 “우리에게 폐물이 된 것을 계급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 대중들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평범한 대중들에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명박 등장 이후 ‘차익’ 논리 속에 그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촛불항쟁 이후 급진화한 청년들도 곧바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민

주당 좌파나 급진 개혁주의를 지향한다.

그래서 올해 언론악법 등 MB악법에 맞선 투쟁에서 다수 대중은 민주당이 미덥지 않지만 이명박에 맞서 민주당까지 포함한 광범한 연대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대중들 속에서 활동할 줄 알아야 하고 불가피하다면 이를 위해 자본가 정당과도 일시적으로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불가피한 타협조차 거부하는 사노련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 반이명박 투쟁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정치 투쟁의 정점이었던 6.10 대회가 그것을 보여 줬다. 당시 노무현 사망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던 정세 속에서 좌파는 이명박의 반민주적 개악에 맞선 투쟁과 쌍용차 등 노동자 투쟁을 결합시키며 반이명박 정치투쟁을 발전시켜야 했다. 6만여 명이 결집한 6.10 대회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런데 사노련 등 종파적 좌파들은 민주당이 공동 주최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6.10 대회에 개입하는 것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 집회에 참가해 연대를 호소하는 것 모두를 마뜩찮아 했다. 반면 민주당을 추수하던 개혁주의 지도자들 또한 6.10 대회에 급진좌파들이 개입하거나 쌍용차 투쟁의 요구들이 결합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았다.

결국 개혁주의자들의 민주당 추수와 종파적 급진좌파들의 정치적 무능력 덕분에 민주당은 6.10 대회 후 투쟁의 열기를 식히며 별 저항 없이 국회로 복귀했고,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언론악법 날치기와 쌍용차 살인진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9월 26일에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야4당(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용산범대위가 공동 주최하는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용산범대위 소속 단체인 사노련은 이 집회에도 불참할 것인가? 이 집회 개최를 합당한 다른 좌파 단체들도 기회주의라고 비난할 것인가? 민주당의 공동 주최는 용산참사 항의 투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크고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회주의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정당들조차 민주당과 똑같이 취급하며 어떠한 지지도 없이 비판만 하는 것, 공동 투쟁의 건설에는 관심 없고 진보정당들을 폭로하며 자신들의 의제만을 선전하려 하는 것은 사노련의 구제불능의 종파성만 보여 준다. 이것은 사노련이 지난해 촛불항쟁 때도 뒤늦게야 운동에 뛰어들어 별다른 구

실도 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했다.

불가피한 전술적 타협은 한사코 거부하는 사노련이 자본주의 국가의 탄압에 대해서 실용주의적으로 타협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물론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노련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에 맞서 단호하게 방어해야 한다. 실제로 ‘다함께’는 지난해부터 ‘사노련 탄압에 반대하는 공동 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고 <레프트21>도 사노련을 방어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실었다.

그런데 사노련 활동가들은 국가의 탄압에 맞서 철저하고 일관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경찰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사실상 협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대책위 내에서도 사노련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에 대해 가장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거듭 나왔다. 올해 초 용산참사 항의 투쟁에 대한 경찰 소환에 대해서도 사노련의 파견자는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고 적당히 둘러대고 나왔다’며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반면, 소수의 자기만족이 아닌 진정으로 대중적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이루려 한다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타협과 유연한 전술적 대응은 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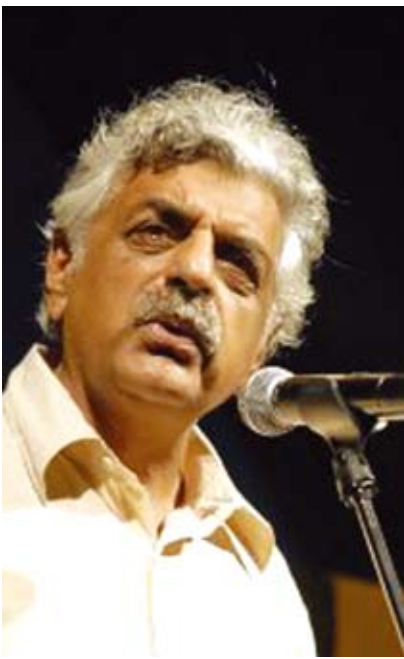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이 글의 축약되지 않은 원문은 웹사이트를 보시오

‘테러와의 전쟁’ 과 반전 운동

타리크 알리 인터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탈은 병력 증원이 없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자 주디스 오어가 작가이자 방송인, 좌파 활동가 **타리크 알리**를 만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전망을 물었다. 타리크 알리의 주요 저서 중 《근본주의의 충돌》(이토), 《1968》(삼인)과 이슬람 소설 3부작 《술탄 살라딘》(미래인)과 《석류나무 그늘 아래》(미래인) 등이 국내에 번역돼 있다.

당신은 ‘맑시즘2009’ [영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사회주의 포럼]에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보기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연설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현재 상황은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군 장성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수십 년은 아닐지라도 몇 년은 더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미 이 전쟁은 이길 수 없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은 이미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군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의 목표가 거듭 바뀌듯이 오늘날 미국은 패배한 것처럼 비치지 않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2001년에 많은 반전 활동가들이 경고했듯이 군사 점령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단지 좌파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워싱턴과 런던의 정보부 고위 인사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소동은 침략과 점령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외에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합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모두 선거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거가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중심지라는 북미와 서유럽에서도 민주주의가 앙상한 때대만 남은 마당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거는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또 ‘형식적 민주주의’로 불려야 마땅한 이데올로기적 과정이기도 하고 그럴 듯한 가면을 쓴 권위주의적 지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군이 점령한 이라크에서 이 과정을 확인한 바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보다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결과 당선자가 정당성을 얻을 것이란 주장은 카불에 사는 사람들 일부의 환상이거나 서방 기득권층과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언론의



2009년 8월, 아프가니스탄 외르닥 주에서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미군

뻔한 조작일 뿐입니다.

대선 결과가 무엇이든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미드 카르자이의 아프가니스탄은 지지분한 마약 거래 국가입니다. 그의 동생 왈리 카르자이는 아프가니스탄 최고의 갑부인데, 그는 마약과 무기 거래, 형의 권력을 떠받쳐 준 나토군 덕택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카르자이와 대적한 두 대선 후보는 한때 카르자이 정부에서 일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카르자이를 버리고 자신들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주길 바라는 바보들입니다. 카르자이는 이란 서부의 초보수적인 시아파 종교 근본주의자들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카르자이는 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부부 강간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새 정부에 5명을 입각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런 조치에 침묵했지요.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현재 서방은 카르자이 정부의 부패 등 여러 문제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기어코 이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방이 카

르자이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대체 인물을 찾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지난해 서방은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만 부추길 것이라 생각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새 인물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설사 카르자이가 다른 인물로 교체된다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외국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을 이끌고 있는 신(新) 탈레반과 수차례 비밀 협상을 벌였지만 지금껏 외국군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있는 한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주변 파키스탄 지역까지 전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언론을 보면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접경 지역 ‘탈레반’이 분쇄됐고 그 지역에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파키스탄 군의 호위를 받아 귀향하고 있다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이번 군사 작전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파키스탄 지역으로의 확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버락 오바마가 이란 테헤란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숨진 젊은 여성에 대해 애도를 표할 때, 미군 무인 폭격기는 파키스탄에서 60여 명을 살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비겁한 BBC도 이들을 ‘저항군’으로 부르긴 어려웠을 겁니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TV도 그들의 모습을 비추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이른바 ‘선한 목적’에 희생된 것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탈레반이 끔찍하게 반동적이고 야만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파를 참수하는 것이나 여성들을 구타하는 것 등을 보십시오. 이런 행

동 때문에 대다수 파키스탄 사람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로 군대가 나서 살육전을 펼치는 것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파키스탄군의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매파 자유주의자들은 얼마나 많은 파키스탄인들의 죽음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그보다 더?

파키스탄 탈레반은 정치적으로만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어겼다면,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지 살해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 정부는 빈민들의 교육과 보건, 주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이라크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후퇴로 기록할 것이라 보십니까?

이라크 전쟁은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은 여지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획은 미군을 주거형 군기지에 영구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영국 제국은 이것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이 이라크인들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보십니까?

점령 동안 이라크인 1백만 명이 죽고 5백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사회안전망은 해체됐습니다. 한때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여성들은 이제 다시 베일을 쓰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쫓겨나가거나 살해당했습니다. 남녀 연인이 함께 바그다드와 바스라 거리를 다니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후세인 치하에서도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라크가 하나의 국가로 존속하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라크인들은 이라크가 사실상 세 개의 보호령, 즉 이라크 남부는 이란의 보호 아래, 중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보호 아래, 쿠르드 자치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보호 아래 쪼개지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발칸에서 이와 유사한 시도가 재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이라크에서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바마가 국내 문제에서 갈수록 위기를 겪는 것이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국내 정책을 폈지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바마의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극우파이거나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는 오히려 오바마를 지지하고 그가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하길 바랍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무브 온(MoveOn.org)과 그 동맹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반대 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문제조차 끊임없이 [우익과] 타협하려는 오바마의 행동 — 예컨대 흑인 교수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경찰관을 백악관에 초대해 그 교수와 화해하게 하는 등 — 은 국내 정책에서든 대외 정책에서든 좋지 않은 조짐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한 주류 방송국 기자는 저에게 “내 가장 큰 근심은 오바마가 미국판 토니 블레어가 되는 것”이라고 털어놓더군요. 이 기자는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가 집권한]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영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번역 조영훈 기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독자에게는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조너선 닐, 책갈피)을 추천합니다.

칼럼/논설

우석균 칼럼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시기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피해 도망가는 일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스페인독감 때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병이 돌던 시기에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러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지난달 21일 정부는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방침을 바꾼 보건소는 집단감염만 책임지고 일반 환자는 일반 병의원에 가도록 방침을 바꿨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조선일보>를 보면 신종플루가 걱정돼 보건소에 가면 병원에 가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다시 보건소로 가라고 하는 ‘핑퐁식 떠넘기기’가 일어났다. 환자들만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병원이 전염병 환자를 무서워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전국에 4백 몇십 개를 지정한 거점병원 은 어떤가? 보건복지부가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지정한 후 병원장들과 회의를 연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손실보전에 관한 이야기였다. 거점병원이 되면 격리병실을 운영해야 하니 환자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주문, 거점병원이 되면 환자가 병원을 기피하게 되니 이 손실을 보충해 달라는 주문. 그러나 병원장들의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거점병원을 취소해 주는 것이다”라는 발언이었다고 한다.

한국 의사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한국의 민간병원들이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을 싫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의 지원도 없는 마당에 컨테이너 진료실이라도 마련해야 하고 격리병상도 마련해야만 한다.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일 뿐이다. 그런데 거점병원이 제 구실을 하려면 격리병실만이 아니라 중환자실도 격리중환자실이 있어야 한다. 더 엄격히는 한 번 들어간 병균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음압(negative pressure)시설을 갖춘 병실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은 평상시에는 불필요한 시설이다.

거점병원 지정도 부담스러워 하는 민간병원들에게 평상시 쓰지 않는 시설까지 갖추라고 한다? 한마디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꼴이다. 다른 나라들이라고 이러한 문제가 없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여기서의 비밀은 바로 공립병원이다. OECD 나라들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립병원 비율은 미국과 일본이 약 30~40퍼센트일 뿐 대부분의 나라가 60~90퍼센트에 달한다. 또 민간병원 중 대다수 비영리병원은 오래된 ‘진짜’ 비영리 병원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와는 무관하다. 한국은 어떤가. 공립병원이나 보건소는 전체 의료기관 중 7퍼센트 정도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다. 공립병원이 거의 없다 보니 거점병원을 특별히 지정한다. 환자를 보건소에서 본다, 아니 이제부터는 거점병원에서 본다 등등의 ‘호들갑’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의료민영화

지금 한국 정부는 신종플루의 사망률이 “예년의 계절독감 수준과 비슷”하므로 “국민들은 지나친 동요나 과잉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다. 그런데 막상 안심을 하려 해도 한국 정부가 준비한 것이 없다. 백신도 모자라고 타미플루인지 뭔지도 모자란다고 한다.

몇 달 전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갖춘 병원이 전국에 다섯 군데밖에 없어 경상도나 충청도, 강원도에서 입원환자가 발생하면 목포와 서울로 가야만 했다. 또 언제는 보건소로 가라더니 이제는 보통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동네병원에 갔더니 검사가 안 된다고 큰 병원 가라고 한다. 막상 거점병원을 찾아 갔더니 검사비용만 20만 원이 든다고 한다. 국가재난사태라고 말하면서 막상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다 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당신 같으면 혼란스럽고 동요하지 않겠는가?

다른 나라들은 다 조용하기만 한데 한국만 유독 신종플루에 ‘호들갑’을 편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상의료에 가까운 시스템, 즉 공립병원이 대부분이고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호들갑을 떨래야 떨 수가 없다. 이윤을 위해 병원들이 운영되지 않으니 전염병 대응시설을 평상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점병원 등은 원래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들이 담당하면 될 일이다. 원래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리도 없다. 대국민 홍보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인 의료인들이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공공시설인 동네의원에서 주치의별로 원래 자기 환자들에게 하면 된다. 그 나라에서 유난탈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다못해 미국과 일본만 해도 공공병원이 30~40퍼센트는 되니 그를 중심으로 대처하면 된다.

한 사회가 의료시스템만이라도 돈벌이를 최고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백신도 미리 사놓고 항바이러스제도 준비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의료산업화’나 ‘의료선진화’나 하면서 오직 정부가 하려는 것이 지금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병원들을 아예 기업형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공립병원도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미리 치료제와 백신을 준비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에 편다고? 국민들은 신종플루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다. 의료시스템이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더 공포로 몰고가는 이 사회가 바로 국민들을 동요하게 하고 있다. 이 이윤중심의 의료체계를 더 돈벌이로 몰고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있을 뿐이다. 병원이 전염병 환자를 꺼리는 야만적인 사회가 더는 아닐 때 한 사회는 전염병의 공포에서 비로소 벗어난다. 그리고 이런 야만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바로 무상의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실패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이미 누더기가 된 미군과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정당화 논리가 최후의 일격을 맞았다.

지난여름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영국군 사상자가 급증하자, 군대변인은 이들의 죽음이 8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희생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폭두각시 구실을 해 온 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대선에서 선거 부정을 광범하게 저질렀다는 의혹이 이제 진실로 굳어졌다. 9월 11일 BBC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 바바지의 투표소 4곳 중 3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프가니스탄 선거지원위원회(ECC)는 선거 부정 증거가 발견된 70여 개 투표소의 투표용지들을 개표 과정에서 제외했다.

“조사 중인 바바지 주 투표소들에서 투표용지 수천 장이 나왔는데, 한 선거감시단원은 자신이 있었던 투표소에서는 하루 동안 기껏해야 15명이 투표했다고 말했다.”

선거 부정이 의심받는 투표용지들은 대부분 카르자이를 찍은 표들이다. 선거 부정이 점점 분명해져 가자 신노동당의 외무장관 데이비드 밀리반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다. 나는 이런 곳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에 흥분할 생각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할 생각도 없다.

“영국의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새 정부가 먼저 신뢰할 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세 가지, 즉 보안군, 정치적 통합력, 경제 재건 능력을 발전시킬 명확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다.”

달리 말해, 아프가니스탄 대중이 스스로 뽑은 정부를 갖는 게 아니라 서방이 바라는 정부, 즉 서방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책을 가진 정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과 이란의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나 짐 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가 선거 부정을 정당화한 논리가 무엇이 다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물론 아마디네자드와 무가베는 틈만 나면 서방을 비난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폭두각시가 저질렀다면 선거 부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오바마 정부가 카르자이의 부패와 무능에 못견뎠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달 전 카르자이와 공공연히 말다툼을 벌인 미국의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특사 리처드 홀브룩은 막상 카르자이의 선거 부정 증거가 발견되자 재선거 실시 가능성을 일축해 버렸다.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이 자신의 폭두각시 정부의 요구에 어떻게 휘둘리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베트남 전쟁 후반, 미국이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은 주요인 중 하나는 남베트남 대통령 응우옌 반 티에우의 생떼쓰기였다.

티에우는 미국의 군사력과 재정 지원 덕분에 권좌를 유지했다. 만약 미국이 그를 간단히 내쳤다면, 그것은 남베트남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베트남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훼손했을 것이고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낳았을 것이다.

1963년 남베트남 대통령 응고 딘 디엠 정부가 전복되고 디엠이 암살되는 것을 방조한 존 F. 케네디 정부는 이 점을 깨달았다.

오늘날 미국과 그 동맹들도 비슷한 이유로 골치 아픈 카르자이를 쉽게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도 옛 베트남 전쟁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타임>과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면, 나토 내 독일 점령군의 공중 폭격으로 쿤두즈 지역 민간인이 학살 당했을 때, 나토군 총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틸은 나토 사령부에 급주령을 내렸다. <데일리 메일>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한다. “카불의 나토 사령부에 있는 대원들은 ‘만취했거나 숙취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총사령관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나토군 병사들은 정말 자기 일을 즐기고 있는가 보다. 마치 <지옥의 묵시록>[베트남 전쟁을 다룬 반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은가?

번역 조명훈 기자

논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경제 살리기’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지지까지 얻어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의 본색이 드러나고 ‘경제 살리기’가 실패하면 언제든지 떨어져나갈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었다. 실제로 집권 후 이명박의 친재벌·우파적 본색이 드러나면서 지지 기반이 붕괴했고 촛불항쟁 때는 정권 퇴진 위기까지 왔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경제 살리기’도 파탄나면서 위기는 악화돼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과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속에 떨어져 간 중도층이 일부 돌아온 듯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남경필도 지적하듯이 이명박의 ‘친서민’은 “‘말의 정치’에 머물러 있다.” ‘해고는 살인’이라며 절규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난 3년간 사용된 최루액의 95퍼센트를 쏟아붓고는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이명박 라디오 연설)이라고 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선거 얘기 자주 하면 서민들이 짜증난다”며 다가오는 각종 선거에서 패배를 걱정하는 이명박은 당분간 ‘친서민’ 위장을 계속할 것 같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탈세 등을 기본 ‘스펙’처럼 쌓아 온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이런 위장의 효과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재산 평균이 33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줄었다고 ‘강부자’ 내각이 갑자기 ‘친서민’ 내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치의 세 기둥인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법관이 줄줄이 불법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이 정부가 외쳐 온 ‘법 질서 확립’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업주와 “형제같이” 지내며 1천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다는 정운찬의 사례처럼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아로새겨진 체제 속에서 ‘흙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저들의 딜레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대항마를 키워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견제한다는 전략도 나중에 갈등과 분열의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무엇보다 경제 위기다. 홍종학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 회복 조짐은 “‘착각’에 불과하다. 돈 놓고 돈 먹기로 경제가 회복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깊숙히 연관된 세계경제가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위기 이전인 2007년 때보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더 악화했다”고 진단한다. 누리엘 루비니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심지어 “1천 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친서민’ 위장의 약발이 떨어지고 경제가 다시 추락하면 위태롭게 복원중인 이명박의 지지 기반은 또 다시 급속히 붕괴할 것이다. 그나마 딱히 대안이 없다는 대중적 정서만이 이명박이 기댈 언덕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올 인했지만 민주당은 언론악법 철폐를 위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중산층의 신뢰를 받으려면 좌파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개혁적인 척하면서 반서민 개악을 추진하는 ‘서민 없는 친서민 정부사기극’의 원조는 사실 민주당이다. 따라서 “차이를 넘어”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정부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민주통합시민행동)는 말에 혹해서는 안 된다.

상반기에 이명박의 질주를 부분적으로 저지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노동자·서민들의 반발과 투쟁이었다. ‘만사형통’이라던 이상득을 무대에서 내려가게 한 것도, 비정규직법 개악을 일시 중단시킨 것도, MBC 사장 교체 시도를 잠시 중단시킨 것도 이런 저항 덕분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신경질을 내는 것이고 이것이 그토록 통쾌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에서도 진보진영은 단결된 대응을 해야 한다. ‘서민 없는 친서민 정부’의 실체를 폭로하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이 싫지만 민주당도 미덥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성과를 거두고 노동자·서민들의 자신감을 높인다면 하반기 이명박의 MB악법 강행과 비정규직법 개악,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개악 등에 맞선 노동자·서민들의 투쟁 건설에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불신임 운동



부산대 이명박 불신임 투표 캠페인 부산대는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가 성사됐다.

사진 제공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9월 8일부터 시작된 이명박 불신임 대학생 선언운동에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의 지지가 모이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가 불신임 운동을 하기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1퍼센트가 이명박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거나 매우 실망했다고 답했다. 또 58퍼센트는 총학생회가 학생 권의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 정치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산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런 학생들의 여론을 따라 만장일치로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를 결정했다. 학교 당국

은 선거인 명부를 넘겨주지 않고 투표를 방해했지만, 총학생회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싸우면서 총투표를 성사시켰다. 서울산업대 당국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불신임 운동에 함께하는 것을 문제 삼아 기표소를 주지 않겠다고 방해했다. 그러나 불신임 투표를 시작한 첫날에만 5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줄지어 투표에 참가하는 등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는 뜨거웠다. 한국의대에서도 투표 첫날 오전에만 학생 4백 명이 투표에 동참했다. 투표가 종료된 광주교대에서는 전교생 1천9백여 명 중 1천1백 명이 참가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예비초등교사들의 임용을 축소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이명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맞물려 벌어진 결과였다. 불신임 투표를 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불신임 선언 서명을 받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는 1천5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9월 23일 현재 전국적으로 9천6백여 명의 학생들이 불신임 선언에 서명했다. 국민대와 성신여대 등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캠페인을 돕고 싶다고 나섰다. 대학생행동연대는 모금을 통해 불신

임 선언 운동의 성과를 9월 29일 대학생 총궐기에 즈음해 신문 광고로 알릴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이 운동의 대의에 공감해 광고비 액수를 정하지 않고 모인 모금액만 받고 광고를 실어 주기로 했다. 불신임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를 모아 9월 29일 총궐기 때 가능한 큰 행동을 조직해 낸다면, 이명박에 맞선 더 큰 운동으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29일에 열릴 대학별·거점별 집회에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서법진 대학생행동연대 공동상황실장

중앙대 학생 징계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했던 징계 대상자 4명 중 ‘도의적 사과’라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3명에 대한 징계 시도를 철회했다. 그러나 9월 14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안국신 부총장은 이번 징계는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학교의 입장과 원칙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 글에 즉각 반발했다. 권위주의적이고 위협적인 부총장의 글을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한 학생은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걱정에 떨게 했던 이유가 권위 강화를 위한 쇼라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그씨의 일들이 떠오르는 건 저뿐일까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마지막 남은 징계 대상자인 대학원생 최영화 씨는 “부총장이 올린 글을 보니 더더욱 학교 측의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 당국의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징계를 시도함으로써 진 교수님 문제를 덮어 버리고 수업권을 박탈하고 굴욕감을 ‘학습’ 시키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징계는 제 투쟁의지를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 재임용과 학생 징계 시도 철회 비대위’와 ‘대학생 다함께 중앙대 모임’도 마지막 남은 징계 대상자 최영화 씨를 방어하고,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학내 곳곳에 부착했다. 동시에 징계 대상자를 방어하는 서명을 받으며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의 부당한 징계 시도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징계 대상자의 단호한 태도와 그를 방어하는 학생들의 활동은 총장에게 ‘도의적 사과’를 했던 학생의 마음도 움직였다. 그 중 한 학생은 대자보와 학교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학생들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목적도 옳았고 표현 방식도 현명했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아무런 잘못된 것도 없이 도의적 사과를 한 것”이라며 “2만 의혈 학우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학교 당국은 두 손을 들었다. 대학원장은 〈대학원신문〉에서 “무단침입의 고의성이 없는 등

징계위를 소집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덧붙여 대학원장은 “조사 결과를 학생지원처에 보냈다”고 말했다. 사실 대학원장은 두 번의 면담에서 징계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을 ‘부탁’ 했다. 하지만 대학원장은 징계 대상자의 단호한 태도와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경우 쏟아질 학내외의 비난과 저항이 두려워 징계위 소집을 포기했다. 대학원 징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 시도가 사실상 철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원장의 징계위 소집 포기는 학생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대학원장이 보낸 조사 결과 때문에 학생지원처와 총장은 무척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들의 본심은 사과를 하지 않은 ‘괘씸한’ 학생에게 징계하고 싶었지만, 대학원장의 징계위 소집 포기로 징계하

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이다. 대학원장의 징계위 소집 포기 소식을 듣기 전 최영화 씨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에서 사실 징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다. 투쟁의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학교 측은 치졸, 악랄한 명분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당한 학교 당국의 징계 위협에 맞서 끝까지 정당성과 명분을 지켰던 쪽이 승리했다. 더불어 이 승리는 앞으로 두산 재단과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건 선례가 될 것이다. 이 경험은 앞으로 있을 학내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상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신동익 대학생 다함께 중앙대 모임



2호(2009년 여름호, 15,000원) 목차

자발성, 전략, 정치 _ 크리스 하먼
네그리와 하트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지키기
세계의 노동계급 _ 크리스 하먼
세계화,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국의 성장통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2009년 노동조합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인터넷 민주주의 — 신화와 현실
조직자 (소셜리스트 워커)
민주집중제에 관한 메모

1호(2009년 봄호, 12,000원) 목차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세계화와 신경제라는 신화
‘다중 지성’은 유효한 개념인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에 부쳐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노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윤소영 교수의 일튀세르주의
촛불운동과 다함께
용산참사 항의운동 참가 경험을 돌아보며
파병반대국민행동 논쟁사

구독 신청 문의

Tel 02 2271 2395 / Fax 02 2271 2396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서울대앞)
인서점 (건국대앞)
풀무질 (성균관대앞)
이음책방 (대학로)
녹두 (동국대후문)

매주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 금 저녁 7시~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크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해화역 4번 출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 소공원
건대입구역 5번 출구